



ISSN 1228-291X

특별기획

2026 교육개혁

CEO 칼럼

2026 교육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

파워인터뷰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의 만남

특별기획

1. 2026년 교육개혁과 한국교육개발원의 역할
2. 교육개혁 실현을 위한 제언과 과제 : 국민주권정부를 중심으로

세계의 교육

1. 중국의 교육정책을 들여다보다
2. 인식론적 형평성과 포용적 교육을 위한 정책적 실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인종학(Ethnic Studies) 교육과정

교육현장 Report

1. 농어촌 학교에서 피어난 내일의 꿈
2. 삶을 과학으로 읽다
- 디지털 과학 숲(FOR-REST)
프로젝트로 미래 시민 과학자 양성하기

교육통계 Focus

교육정보화에서 AI·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으로

KEDI 교육연구

연구로 읽는 교육정책의 미래
KEDI 주요 연구 성과 소개



Contents

2026 봄호
(통권 제238호)



ISSN 1228-291X

2026 Spring 교육개발

발행처 한국교육개발원

발행인 고영선

편집장 채경은

홍보·출판심의위원회

유경훈, 박효진, 안영은, 문보은, 김진희, 임종현, 김지우, 김나영,
이수환, 김택형, 채경은, 한지연

편집 한지연

디자인 더생각 070.4110.1222

홈페이지 www.kedi.re.kr

교육개발 웹진 www.kedi.re.kr/edzine/ednews/index.jsp

발행 2026년 3월

계간등록번호 진천, 바00002

등록변경 2024년 5월 27일

정가 6,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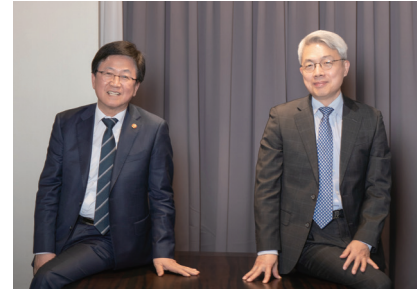
문의 043-530-9227, keditor@kedi.re.kr

「교육개발」은 한국도서잡지 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우리 원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4

CEO 칼럼

2026 교육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

06

파워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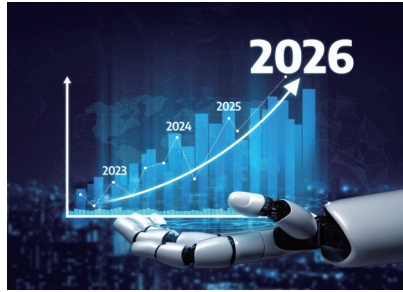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의 만남

14

특별기획

2026 교육개혁

1. 2026년 교육개혁과 한국교육개발원의 역할
2. 교육개혁 실현을 위한 제언과 과제 :
국민주권정부를 중심으로



28

세계의 교육

1. 중국의 교육정책을 들여다보다
2. 인식론적 형평성과 포용적 교육을 위한 정책적 실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인종학 (Ethnic Studies) 교육과정

42

교육현장 Report

1. 농어촌 학교에서 피어난 내일의 꿈
2. 삶을 과학으로 읽다
 - 디지털 과학 숲(FOR-REST) 프로젝트로 미래 시민 과학자 양성하기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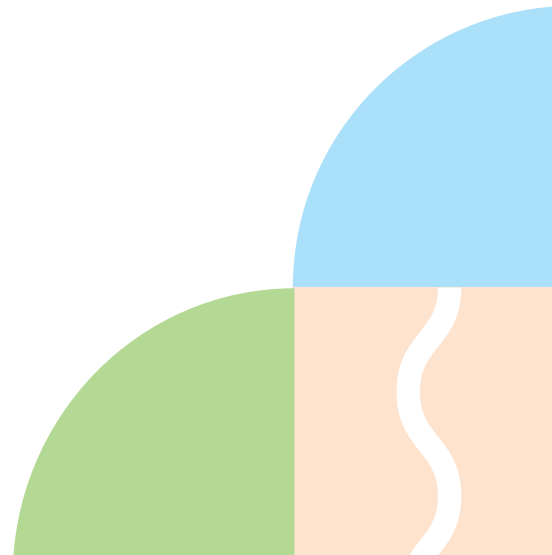
교육통계 Focus

교육정보화에서 AI-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으로

66

KEDI 교육연구

연구로 읽는 교육정책의 미래
KEDI 주요 연구 성과 소개



CEO 칼럼

2026 교육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

고영선(한국교육개발원 원장)



Education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경제성장을 이루고 근대적 시민국가로 재탄생하는 데 교육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도 정부는 학교를 짓고 교사를 양성하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교육투자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열, 그리고 교사들의 사명감과 헌신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은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전 세계의 모범이 되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우리 교육이 많은 문제에 봉착해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OECD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학습 흥미도는 최하위권이다. 여기에 더해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부모의 소득격차가 자녀의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부(富)가 대물림된다는 우려도 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중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고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도 우리 교육의 아픈 부분이다. 상대평가 때문에 교실 안에서 배려와 협력의 문화보다 경쟁과 갈등의 문화가 자리 잡았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우리 대학의 국제경쟁력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연구논문 발간 실적에서 중국이 불과 수십 년 만에 세계 최정상으로 발돋움한 것과 너무나 대조된다.

정부가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지금은 우리 교육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확히 식별하고, 이를 가로막는 핵심적인 장애요인을 파악해 극복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개혁은 다음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첫째, 교육개혁은 철저히 학생의 교육적 성과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어떤 개혁안이든 그것이 교육적 성과를 높이는 데 실제로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권 추락 문제에 대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방안을 논의한다면, 이것은 궁극적으로 학생을 위한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교권을 확보함으로써 교육적 성과를 높이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며, 교원 지위향상 자체는 궁극적 목표가 아니다. 예를 들어 교원 가운데 능력이 뛰어나고 열의가 높은 분들이 더 많아지도록 제도와 정책을 설계함으로써 교육적 성과도 높이고 교권도 확립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둘째, 교육적 성과를 높일 때는 특히 저소득층 학생이나 이주배경 학생과 같은 취약집단의 교육적 성과를 높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일부 복지사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학교 간 서열을 완화하는 것만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우리 교육 시스템의 골격에 내재되어 있는 불평등성을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일수록 리더십 있는 교장과 수업 역량이 뛰어난 교사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인지적 능력과 사회정서역량을 포함한 교육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사회적 형평성이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또한 비인지적 능력과 사회정서역량을 포함한 교육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사회적 형평성이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한편, 획일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의사결정 관행에서 벗어나 학교 공동체가 스스로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찾아 해결할 여지를 넓혀줄 필요도 있다.

셋째, 경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재정립해야 한다. 초·중등교육의 경우에는 지위재(position goods)를 얻기 위한 낭비적 경쟁이 심각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대평가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 이것이 어려운 이유가 학교 간 객관적 성적 비교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면, 국제바칼로레아(IB)의 사례처럼 교사들이 모여 공통의 기준을 함께 만드는 방안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근본 대책에 대한 고민 없이 현재와 같이 교실 내 경쟁을 방치하는 것은 모든 관계자들의 책임 방기라 할 수 있다. 반면 고등교육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강력한 대학 간 경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학의 경쟁력을 세계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교육 성과와 연구 실적을 낸 대학은 성장하고 그렇지 못한 대학은 낙오되도록 하는 경쟁 구조를 구축하는 것 외에 별다른 방안이 있을 수 없다.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로 우리 교육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적 호기심, 논리적·창의적 사고력, 사회정서역량, 소통능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우리 국가교육과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능력을 키우는 데 방점을 찍어왔다. 이제는 교육개혁이 실제 성과를 낼 시점이다. 

파워인터뷰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의 만남

최교진(교육부 장관)
고영선(한국교육개발원 원장)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대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는 우리 교육이 기존의 틀을 넘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을 ‘교육개혁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선언하고, 경쟁 중심의 교육 구조를 완화하며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과 교육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 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AI 시대에 필요한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교육,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학교와 대학의 구조 혁신,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교육 정책을 중심으로 우리 교육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다양한 개혁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개혁은 단순한 제도 변화에 그치지 않고,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교육 전략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공교육 안에서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교육 의존 구조를 완화하는 한편, 지역대학과 학교가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이는 교육이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지역과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번 <파워인터뷰>에서는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만나 2026 교육개혁의 핵심 방향과 주요 정책 과제, 그리고 우리 교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최교진 장관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지금이야말로 교육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한 정책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였다.

“교육을 함께 만들어 가는 모든 분과 소통하며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할 것”

고영선 본격적인 인터뷰에 앞서 먼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 전문지 「교육개발」 독자분들을 위해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교진 네, 반갑습니다. 「교육개발」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선생님들의 노력과 교육을 연구하는 분들의 깊은 통찰, 그리고 교육 정책을 고민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함께 모여 우리 교육의 방향을 차분하게 논의해 온 소중한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어느 한 사람의 힘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교육 현장과 연구, 정책이 서로 손을 맞잡고 함께 지혜를 모을 때 비로소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육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우리 학생들이 마음껏 배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함께 만들어 가는 모든 분과 소통하며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창조적인 질문을 던지고 사회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전환”

고영선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격차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는 현 상황에서 교육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배경과 핵심 방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교진 현재 우리는 학령인구 감소, 인공지능 대전환, 지역 격차 심화 등과 같은 사회구조적 변화와 충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이 더욱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도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AI 시대에 걸맞은 교육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지식암기와 정답 찾기 중심의 표준화된 인재 양성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창조적인 질문을 던지고 사회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초등학생부터 성인학습자에 이르기까지 AI 시대의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이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 수업과 평가 방식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역과 교육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통폐합 인센티브 지원, 학교복합시설을 확대하는 등 소멸위기지역의 교육지원 방식 등을 과감하게 혁신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 학교와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

고영선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학교 통폐합 등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대비해 교육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교진 현재 인구절벽에 따른 인구 감소와 학령인구 감소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많은 지역 대학들이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사회와 학교가 체감하는 위기감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학교와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하여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 머무르며, 지역의 미래를 고민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아울러 소멸 위기 지역의 학교를 지역 거점으로 재구조화하고, 통폐합 인센티브와 학교복합시설 확대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위기를 극복 해나가겠습니다.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
함께 참여하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운영”**

고영선 교육 불평등 해소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역할 분담과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개혁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줄이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거버넌스 전략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교진 교육부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에 따른 학생 간 AI 활용 역량 격차, 인구 감소 지역 소규모 학교의 교육력 격차 등 사회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현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부교육감회의 등 소통 협의체를 매개로 교육 정책을 논의하며 상호 협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교육 정책을 논의하는 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정책 기획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정기적인 협의 기구로 발전시켜, 향후 교육개혁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고 소통하는 중요한 창구로 기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한 과목을 책임감 있게 학습하고, 학교가 성취기준 달성을 체계적으로 지원”

고영선 현재 고교학점제는 교육 현장의 핵심 관심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으로 달라진 것은 무엇이 있으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전략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교진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하는 제도로 2025년 고교 신입생부터 전면 도입되었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의 가장 큰

변화는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한 과목을 책임감 있게 학습하고, 학교가 성취기준 달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학습 체제가 전환되었다는 점입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고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1월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선택과목 학점 이수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정규 교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한편 농산어촌 및 소규모 학교에 대한 강사 채용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신학기부터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선택과목을 이수하게 되는 만큼, 학교 현장의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완하고 지원을 강화해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교육 체계 안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

고영선 한때 사교육은 ‘열풍’이라는 수식어로 대변되었으나, 이제는 일종의 ‘의존’ 상태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원이나 과외를 하지 않는 학생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장의 실정입니다. 사교육 의존 구조를 근본적으로 완화하지 못하면 교육개혁의 효과도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큼니다. 단순한 규제를 넘어, ‘공교육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정책 수단은 무엇이 있을까요?

최교진 사교육 의존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교육 체계 안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공교육의 역할을 확대하고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초등학교 1·2학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사실상 ‘3시 하교’를 계속 보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연 50만 원 규모의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하여 공교육 안에서 다양한 학습과 활동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중·고등 학생의 경우 교과 보충을 위한 사교육 참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EBS를 중심으로 한 공공 온라인 학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중학생들은 재작년부터 무료화된 ‘EBS 중학 프리미엄’을 통해 교과서 내용뿐 아니라 시중 참고서 풀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등학생들에게는 특히 학습 부담이 큰 통합사회·과학 등의 과목을 중심으로 양질의 콘텐츠 제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EBS 중학 프리미엄 무료 이용자 수 : (‘23) 22.9만 → (‘24) 45.8만 → (‘25) 61.8만 명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지역이 주도하는 사교육 경감 선도모델입니다. 예를 들어 광주 지역에서는 학교 안 스터디룸 운영을 통해 학부모들이 월평균 약 45만 원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체감했다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학교 밖 학습 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이 스터디카페처럼 활용할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지난해 하반기부터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최근 진로·진학에 대한 불안 심리로 인해 컨설팅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대학 진학 상담과 관련해서도 공교육 안에서 온라인을 통해 현직 교사들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교육 의존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수도권 명문대 중심의 경쟁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부는 지역 대학 혁신과 지역 산업과 연계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권이 보호되고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 없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마련”

고영선 교원 수급 조정, 교권 보호, 업무 경감 등 교원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6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히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교원 정책 조치와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교진 교원 수급 조정, 교권 보호, 업무 경감 등 교원을 둘러싼 정책은 어느 하나만을 우선순위로 단정하기 어려울 만큼 학생의 수업권 보장과 학교 공동체 회복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교권이 보호되고 교사가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 없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학생의 학습권도 온전히 보장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합리적인 교원 수급을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이 학교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꿈과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관점에서 교원 관련 정책을 개별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유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교실 수업을 바로 세우고, 학생의 배움과 미래를 위해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대학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현재의 위기를 고등교육 혁신의 기회로 전환”

고영선 대학 체제 개편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원 조정, 대학 간 협력 및 통합, 지역 대학 지원 등과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정책은 무엇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교진 최근 학령인구 감소, 인공지능 대전환, 지역 격차 심화와 같은 사회구조적 충격이 거세지고 있고, 대학 역시 전통적인 역할과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대학과 정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현재의 위기를 고등교육 혁신의 기회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국토공간 대전환의 틀 속에서 지역대학이 지역 성장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도록 ‘5극 3특 성장엔진’ 전략과 연계한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대학에서 양성된 인재가 지역에서 취업하고 정주하며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거점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성장엔진 분야의 브랜드 단과대학과 특성화 융합연구원을 육성하여 기술 기반 성장을 견인하고, 모든 거점국립대학이 권역별 교육·연구 거점으로서 기초교양 교육과 취·창업 프로그램 등을 지역대학과 공유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 간 협력과 상생을 기반으로 한 동반 성장 구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재설계하고, 권역별 인재 육성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대학 간 공유·협력을 중심으로 고등교육 체제를 재구조화할 예정입니다.

올해 8월에 「사립대학교구조개선법」이 시행됩니다. 앞으로 법 시행을 충실히 준비하여, 향후 재정건전대학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경영위기대학의 구조개선 및 퇴로 지원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고영선 교육정책이 현장의 수용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최교진 교육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AI 대전환, 저출생 위기, 지역 소멸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해야 하며, 무엇보다 교육 현장과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학교 현장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10년 이상의 중장기 교육 비전과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교육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또한 국가교육위원회와 협력하여 중장기 교육 비전을 함께 설계하는 한편, 학계·연구기관·교육 현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육정책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교육은 질문과 탐구가 살아있는 교육로 전환할 것”

고영선 이번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향후 5~10년 뒤 우리 학교 현장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시는지 끝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교진 교육부는 AI 대전환, 저출생, 지역소멸 등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는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개혁을 통해 앞으로 학교 교육은 질문과 탐구가 살아있는 교육로 전환할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 본연의 의미와 가치를 창출하는 교육이 강화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AI 시대를 살아갈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AI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되고, 인재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생태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이공 분야는 물론 인문·사회 분야에 이르기까지 AI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인재가 양성되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과 교육이 함께 성장하는 국토 대전환이 실현되길 희망합니다.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방향은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행복하게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교육”

고영선 학생, 교원, 학부모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교진 우리 사회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지금,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방향은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행복하게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헌법교육, 환경교육,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등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역량을 기르고, 경쟁보다 협업을 중시하며 포용과 존중의 가치를 실천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학교 공동체를 회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 모두가 힘을 모아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교육 공동체 속에서 건강한 미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시대,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의 교육 내용과 방식을 과감하게 바꾸어나가야 해”

고영선 앞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의 역할 혹은 한국교육개발원에 바라는 점과, 한국 교육 발전을 위해 어떤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육정책과 관련된 여러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도 당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최교진 한국교육개발원은 53년의 역사를 지닌 교육정책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인재를 양성하며 세계와 경쟁해 온 국가이며,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변화와 도전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 역시 교육을 통해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대,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의 교육 내용과 방식을 과감하게 바꾸어나갈 필요가 높은 시점인 만큼, 한국교육개발원도 교육현장의 근본적인 문제와 원인, 이에 대한 해결책을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여, 교육을 통해 개인이 행복하고, 사회가 건강하며, 국가가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최교진 (교육부 장관)



주요 학력

- 1981. 공주대학교 국어교육학과 학사
- 1972. 경동고 졸업

주요 경력

- 2025.10.1. ~ 현재 교육부 장관
- 2025.9. ~ 2025.9.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2022.7. ~ 2025.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제4대 교육감
- 2020.7. ~ 2022.6.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8대 회장
- 2018.7. ~ 2022.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제3대 교육감
- 2014.7. ~ 2018.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제2대 교육감
- 2012. ~ 2024.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대전세종충남지역위원회 공동대표
- 2005. ~ 200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 2005. ~ 2008. 한국토지공사 상임감사
- 2004. ~ 2005. 자치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 2003. ~ 2007.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집행위원장
- 2001. ~ 2004.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상임의장
- 1990. ~ 1998.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충남지부장
- 1987. ~ 1988. 충청민주교육실천협의회 의장
- 1986. ~ 1987. 충남민주운동청년연합 의장
- 1981. ~ 1984. 대천여자중학교 교사

주요 수상

- 2022.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
- 2007. 대통령표창

2026 교육개혁





특별기획

2026년 교육개혁과 한국교육개발원의 역할

민윤경(한국교육개발원 연구기획실장)

교육개혁 실현을 위한 제언과 과제 : 국민주권정부를 중심으로

김성천(교육부 정책보좌관 / 한국교원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

2026년 교육개혁과 한국교육개발원의 역할

민 윤 경(한국교육개발원 연구기획실장)



성공한 교육 시스템의 역설

전쟁 이후 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한국의 경험을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 부른다. 그 과정에서 교육은 가장 중요한 기반이었다. 자원과 자본이 부족했던 한국이 선택할 수 있었던 현실적인 발전 전략은 결국 사람을 키우는 일이었다고, 교육은

개인에게는 삶을 바꾸는 기회였으며 국가에는 경제성장과 사회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였다.

그 성과는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OECD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ISA) 2022에서 한국 15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수학 527점, 읽기 515점, 과학 528점으로 모두 OECD 평균(수학 472점, 읽기

476점, 과학 485점을 상회했다. 25~34세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도 2024년 기준 70.6%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이처럼 한국 교육은 높은 수준의 성취를 만들어 낸 체제였고, 지금도 많은 나라가 우리의 경험을 모델로 삼고자 한다.

그 성취의 중심에는 한국인의 강한 교육열이 자리 잡고 있다. 교육은 오랫동안 계층 이동의 사다리였고, 부모 세대는 자신이 경험한 결핍을 자녀 세대의 교육을 통해 넘어설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열망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 전체의 움직임이 되었고, 국가 발전을 지탱하는 힘으로 작용했다.

그런데 이 교육열이 언제부터인가 방향을 잃기 시작했다. 배움 자체를 향하던 순수한 열망이 어느 순간 '남보다 앞서는 것'을 향하게 되었고, 교육은 성장의 과정이 아니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이 되어갔다.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는 압박이 극한의 입시 경쟁을 낳았고, 입시 경쟁이 사교육을 키웠으며, 사교육은 다시 불안을 증폭시키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했다.

이 악순환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되는 사이 한국 교육의 풍경은 조금씩 달라졌다. 영유아 시기부터 시작되는 선행학습, 초등학생의 하루를 빼곡히 채우는 학원 스케줄, 중학생이 수면을 줄여가며 버티는 입시 경쟁 등은 이제 낯설지 않은 장면이 되었다.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야 할 교육은 선발의 수단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무엇을 배우고 느끼며 성장하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다. 이제 한국 교육은 과거의 성취가 만들어 낸 관성, 그리고 그 관성이 더 이상 지금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현실 사이에서 구조적 긴장을 겪고 있다.

2026년은 이러한 구조적 긴장이 여러 변화와 맞물리는 시점이다. 학령인구 감소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와 대학 운영의 현재 조건이 되었다. 2025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유·초·중·고 전체 학생 수는 555만 1,250명으로 전년보다 2.3% 감소했다. 반면 초·중등 다문화 학생 수는 20만 2,208명으로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섰다.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학생 구성은 더 다양해지고 있고, 학교가 감당해야 할 과제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인공지능 전환은 교육의 핵심 질문을 바꾸고 있다. 이제는 무엇을 많이 아는가보다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며 활용하는가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지역 소멸의 위기 또한 교육을 지역발전과 따로 떼어 볼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의 교육개혁은 새로운 제도를 하나 더 만드는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과거의 성공을 가능하게 했던 운영 체계가 지금의 조건에서도 유효한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 운영 원리 자체를 다시 정립해야 한다. 앞으로의 교육개혁은 더 많은 경쟁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목적과 운영 방식이 지금의 사회 변화에 맞는지 다시 살펴보는 일이어야 한다.



알고 있지만 바뀌지 않는 이유

한국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는 몰라서 못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바뀌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동안 교육 관련 국책연구기관과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수행해 온 각종 정책 연구를 통해 한국 교육 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이미 폭넓게 축적되어 왔다. 입시 중심 교육이 학생을 소진시킨다는 점, 사교육이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흔들리면서 학교 현장의 피로가 커진다는 점 등은 오래전부터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문제다. 실제로 OECD PISA 2022 국가 노트에 따르면 한국 학생 가운데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22%였다. 높은 학업 성취와 낮은 삶의 만족도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러한 현실은 한국 교육이 오래전부터 구조적 긴장을 안고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문제는 진단의 부족이 아니라 진단 이후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데 있다.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5,000억 원이었고, 사교육 참여 학생 기준 월평균 지출은 6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개인 단위의 부담은 여전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정책은 오랫동안 반복되었지만, 어떤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보였고 무엇이 한계에 부딪혔는지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채 새로운 이름의 정책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았다. 현장에서 어떤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징후가 확인되어도 그것이 제도 조정이나 운영 방식의 변화로 이어지는 속도는 대체로 느리다. 문제를 발견하는 것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서로 다른 차원의 일이기 때문이다. 한국 교육은 문제를 분석하는 탁월한 역량에 비해 분석 결과를 경험으로 체화하여 다음 정책의 자양분으로 삼는 체계는 상대적으로 미비했다.

이러한 현상은 크게 세 가지 요인에서 비롯된다.

첫째, 정책의 단절이다. 혁신학교, 미래형 교육과정, 에듀테크 선도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성과와 한계를 냉철하고 명확하게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일은 늘 충분하지 않았다. 정책이 정권 교체와 함께 바뀌는 구조에서는 단기 성과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장기적인 축적과 학습의 필요성을 외면하기 쉽다.

둘째, 현장의 피로와 형식적 수용이다. 교육개혁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세대와 주체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개혁에 적응하는 데에는 대체로 추가적인 비용과 부담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학부모에게는 기존 전략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이 있고, 교사에게는 새로운 정책이 또 다른 행정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개혁이 학교의 실제 변화를 돕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단순히 위에서 내려오는 새로운 요구로만 느껴질수록 학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 형식적으로 대응하는 데 머무르기 쉽다. 이때 발생하는 것이 '정책의 형식적 이행'이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각종 숫자로 채워지지만, 그 숫자가 실제 교육 활동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는 충분히 확인하지 않는다. 개혁이 반복될수록 피로는 누적되고, 정책에 대한 현장의 신뢰도 약해진다.

셋째, 취약한 환류 구조이다. 새로운 정책이 학생의 배움과 교사의 교육활동, 학교 운영, 지역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장기적으로 추적하는 체계가 부족하다. 시범사업과 선도사업은 많지만, 그 결과가 일반 제도 개선으로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다. 정책을 시작하고 종료하는 시점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배웠는지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단년도 위탁·수탁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는 정책이 종료되는 시점과 효과가 드러나는 시점이 서로 어긋나기 쉽고, 후속 평가나 제도 반영이 의무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요인들은 상호 작용하며 악순환의 구조를 형성한다. 정책이 단절되면 현장은 새 정책에 적응하는 대신 형식적으로 수용하는 전략을 택하게 되고, 현장이 형식적으로 대응하니 환류는 표면적인 정보만을 담게 되며, 환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정책은 다시 단절 속에서 교체된다. 이러한 순환이 지속되는 한 교육개혁은 새로운 구호를 내세울 수는 있어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기는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문제를 더 잘 진단하는 능력'이 아니라 이미 제기된 진단을 토대로 정책을 설계·집행·평가·환류하는 전 과정을 하나의 체계로 보는 '관점의 전환'이다.

정책연구기관의 역할을 다시 묻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1972년 설립 이후 한국 교육의 주요 변화 과정에서 정책 연구와 데이터 축적을 담당해 왔다. 교육체제 개편, 입시제도, 교육통계, 평생학습, 미래교육과 같은 주요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해 왔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 KEDI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는 연구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집적된 연구와 통계가 정책 점검과 제도 조정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교육의 주요 과제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밝히는 데에서 '이미 확인된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해결할 것인가'로 이동하고 있다면, 정책연구기관의 역할도 이에 맞게 다음과 같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첫째, 연구 의제가 현장의 질문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학교 현장은 어떤 학생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어떤 수업 방식이 실제로 작동하는가, 지역의 작은 학교를 어떻게 유지하고 변화시킬 것인가와 같은 구체적인 질문을 던진다. 반면 정책연구는 제도 설계나 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비교적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언어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두 차원 모두 필요하지만, 이 둘 사이의 연결이 약하면 연구는 정교해도 현장과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KEDI는 이러한 간극을 분명히 인식하고, 연구가 현장의 문제와 더 긴밀하게 맞닿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장 교원, 학생, 교육청 등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고, 연구 기획 단계에서부터 현장의 질문을 반영해야 한다.

둘째, 연구 결과가 정책과 학교 현장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더 분명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연구는 정책으로 번역되고, 정책은 다시 사업과 지침으로 구체화되며, 그것이 학교와 교실에 적용된다. 이 과정은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연구의 본래 취지가 약해지거나 일부만 전달되기 쉽다. 따라서 연구를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구 결과가 현장으로 전달되고 적용되며 검증과 환류로 이어지는 구조를 함께 설계하는 일이 중요하다. 정책연구기관의 역할 역시 문제를 설명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결과가 실제 운영 개선에 활용되도록 돕는 데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특히 2026년 이후 주요 정책 과제로 논의되는 AI 보편교육, 학령인구 감소 대응, 다문화·이주배경 학생 지원 등의 영역에서는 연구와 정책, 정책과 사업, 사업과 학교 사이의 전달 경로를 사전에 설계하고 그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이 요구된다.

셋째, 정책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목적과 절차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 수탁사업을 비롯한 여러 정책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일정 준수, 예산 집행, 산출물 제출 등의 행정적 요건을 갖추는 것은 기본이다. 따라서 이런 절차가 잘 이루어지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다. 다만 과업 관리가 사업의 중심이 될 때 본래의 정책 목적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학생이 실제로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경험했는지, 교사의 교육활동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지, 학교 현장의 부담이 줄었는지와 같은 질문은 가장 중요하지만 행정적 편의에 밀려 잊히기 쉽다. 공공사업은 절차적으로 타당해야 하지만 그것이 교육적 목적을 대신할 수는 없다. 절차적 책임성과 교육적 목적은 별개의 기준이 아니라 함께 충족되어야 할 하나의 조건이다.

넷째,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체계화하는 역할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정책은 정권 변화와 정치 일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교육 자체는 효과를 내기까지 훨씬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어떤 정책이 효과를 냈는지뿐만 아니라 어떤 정책이 왜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했는지, 어떤 조건에서 현상이 수용했고 어떤 조건에서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꾸준히 정리하고 기록해야 한다. 이런 축적이 있어야 다음 정책 설계가 이전 경험과 단절되지 않는다. KEDI는 바로 이런 기록과 해석을 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단년도 과제 중심의 연구 구조를 넘어 핵심 정책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을 전제로 하는 중장기 평가 체계를 설계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KEDI의 역할은 연구 성과를 쌓는 데에만 있지 않다. 교육 현장의 변화를 꾸준히 살피고, 그 의미를 분석하며, 그 결과를 정책 개선과 실행 방식의 실질적인 조정으로 연결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2025년 교육기본통계에서 확인된 학생 수 감소, 다문화 학생 증가, 학교·교원 구조 변화는 그 자체로 중요한 정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앞으로 어떤 정책적 준비를 요구하는지 분석하고 제시하는 일이다. KEDI가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수록 한국 교육은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진단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안정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교육개혁의 조건

2026년 교육개혁의 핵심은 새로운 정책을 더 많이 제시하는 데 있지 않다. 이미 드러난 문제를 얼마나 빨리 확인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평가하며, 그 결과를 얼마나 일관되게 정책에 반영할 것인가에 있다. 좋은 교육 시스템은 처음부터 완벽한 정책을 설계하는 능력에서 오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감추지 않고,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며, 그 결과를 다음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갖출 때 비로소 오래 지속된다. 따라서 교육개혁이 지속 가능한 변화로 이어지려면 정책은 늘 점검과 보완의 과정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 KEDI가 수행해야 할 역할은 명확하다. 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개별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꾸준히 살피고 분석해야 한다. 또한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정리해 다음 정책의 기초 자료로 남기는 일도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KEDI가 특히 강화해야 할 과제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책의 누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장기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단년도 사업평가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의 정책이 학생, 학교, 지역에 어떤 변화를 남겼는지를 중장기적으로 분석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AI 보편교육, 기초학력 지원, 지역대학-지역사회 연계 정책 등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학업성취, 삶의 만족도, 지역 유지·이동 패턴 등을 함께 살펴보는 종합 평가가 요청된다.

둘째, 정책의 목적과 집행 사이의 괴리를 점검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정책이 학생의 배움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원한다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집행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가 목적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량 지표뿐 아니라 교사·학생·학부모의 경험을 반영하는 질적 자료가 함께 수집·분석되어야 하며, 그 결과가 공개적으로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평가 결과가 다음 정책에 실제로 반영되도록 하는 환류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무엇이 효과를 냈고 무엇이 한계로 확인되었는지를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결과가 후속 정책의 설계와 집행, 제도 보완으로 이어지도록 연결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평가 보고서가 서류로만 남지 않고 차기 업무 계획과 법·제도 개정 논의의 공식 참고 자료가 되도록 제도적 연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선순환 체계로 작동할 때 비로소 그 효과가 온전히 발휘된다. 장기 평가는 정책이 남긴 결과를 확인하는 일이고, 목적과 집행 사이의 괴리를 점검하는 기능은 정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일이며, 환류 체계는 그렇게 확인된 결과를 다음 단계의 정책 설계와 집행에 반영하는 일이다.

결국 교육개혁의 질은 새로운 정책의 개수가 아니라, 이미 쌓은 경험을 다음 정책 설계에 실효성 있게 이을 수 있는 평가·환류 체계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한국 교육정책의 연속성과 개선 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수 있다. 2026년 교육개혁 역시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질 때에만 일시적 변화에 머물지 않고, 한국 교육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

※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소속 기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교육부. (2025. 8. 28). 「2025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 (2026. 3. 12).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한국교육개발원. (2025. 9. 11). 「OECD 교육지표 2025 결과 발표」.

OECD. (2023). PISA 2022 Results (Volume I and II) – Country Notes: Korea.



교육개혁 실현을 위한 제언과 과제 : 국민주권정부를 중심으로

김 성 천(교육부 정책보좌관 / 한국교원대학교 정책대학원 교수)



들어가며

유튜브(YouTube)를 보다가 종종 인상적인 장면을 접하곤 한다. 쾌적한 지하철과 청결한 휴게소, 카페에서 자리를 비워도 분실 걱정이 없는 핸드폰과 노트북, 홀로 걸어도 안전한 밤거리, 무료로 리필이 되는 밀반찬 등 우리에게는 당연한 일상을 외국인들은 매우 신기해하고 놀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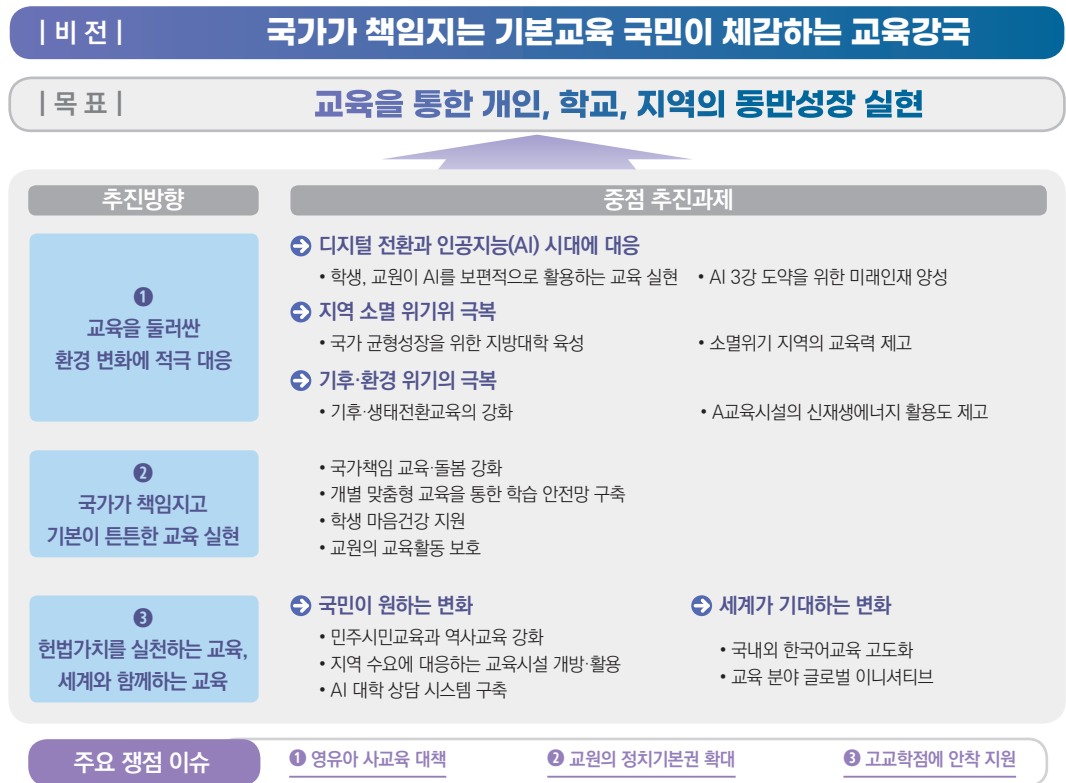
교육 분야는 어떠한가. K-문화에 이어 K-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국제 업무를 담당하는 어느 교육부 관계자는 10년 전과 비교해 한국 교육의 위상이 매우 높아졌음을 느낀다고 말한다. 한국어 교육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부쩍 커졌으며, 대학이나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다양한 해외교류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는 우리 교육이 국제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강점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사교육 열풍, 고난도 수능 문제, 청소년들의 높은 자살율, 과도한 입시 경쟁과 학벌주의 등 아픈 이면도 존재한다. 외국 언론에서도 한국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종종 지적한다. 우리에게는 ‘당연함’으로 느껴지지만, 그들에게는 ‘놀라움’과 ‘충격’으로 다가온다. 우리 교육의 강점은 극대화하고, 동시에 드러난 약점과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우여곡절 끝에 윤석열 정부가 막을 내리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였다. 부동산, 양극화, 경제 활성화, 복지, 노동, 그리고 지역 소멸과 교육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안고 있는 우리 사회의 여러 난제가 국민주권 정부의 출범으로 시원하게 해소되기를 바란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풀어가야 할 숙제와 과제가 적지 않다. 본 고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을 소개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면서 향후 쟁점과 과제,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재명 정부 주요 교육정책의 특징과 의미

[그림1]은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제시한 비전과 목표, 중점 추진과제이다. 크게는 환경 변화 차원에서 ①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시대에 대응 ② 지역 소멸 위기의 극복 ③ 기후·환경 위기의 극복을 제시하였다. 동시에 학교의 역할 변화도 담고 있다. 돌봄과 복지, 안전, 교육활동 보호 등 학교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동시에,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 강화, 교육시설의 개방과 활용, AI 대학 상담시스템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해외에서 한국 교육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이른바 ‘K-교육’의 확산도 정책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림1] 국민주권 정부의 교육분야 중점 추진 과제

출처: 교육부(2025) 업무보고

정권이 바뀌면 모든 정책과 사업이 바뀌는 것인가?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정책의 흐름은 단절과 계승, 변용과 창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김성천(2024)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비교하면서, 정책의 단절과 계승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단절보다는 계승이 많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교육 정책이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기존
 정책을 참고하여 새롭게 진화하거나 재구성하는 속성이 강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정치적 맥락에서는 기존 정책을 똑같이
 추진하기보다는 나름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차별화와 혁신을 도모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향후,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교육 정책을 단절(축소, 폐기), 계승(유지, 확대 발전), 경로 창조의 시각에서 비교할
 필요가 있다. 지면 관계상 모든 정책을 다루기는 어렵기 때문에 본 고에서는 몇 가지 간단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우선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AI 디지털교과서가 현 정부에서 교육자료 형태로 전환된 것은 일종의 정책 축소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AI가 가져오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변화는 엄청나다. 국가 경쟁력, 일자리 창출, 사회적 격차
 심화, 소버린 AI(Sovereign AI) 구축, 문해력 신장, 교육과정의 변화 등 여러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국가적 과제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교육부분만 아니라 모든 정부 부처가 AI 관련 정책에 사활을 걸고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AI
 정책 그 자체는 오히려 확대 발전 및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등교육 분야에서 추진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정책이나 글로벌 대학 사업, 유보통합, 기초학력 보장
 정책 등은 계승의 영역으로 해석할 수 있다. 큰 틀에서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성과 지표를 조정하거나 추진 속도를
 조절하고, 기존 정책을 연계하면서 나아갈 것이다. 다만 고등교육 정책의 경우, 단순히 예산만 대학에 나누어주는 방식은
 곤란하며 지역사회와 대학, 기업의 연계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 만큼 정책 체계나 성과 지표
 측면에서 변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정책 변형의 사례도 나타난다. 윤석열 정부에서 돌봄학교 모델을 강화하였다면, 이재명 정부는 지자체 중심의 돌봄 체계
 확대나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바우처(연 50만원 지원)를 제시하였다. 현실적으로 돌봄 기능을
 지자체로 완전히 이관하고 학교가 돌봄 역할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자체 운영형,
 거점학교 중심형, 시민사회단체 및 마을교육공동체 활용형, 지자체 운영형, 지역아동센터 활용형 등 다양한 운영 모델이
 제시되고, 학교와 지역 상황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화될 가능성이 크다.

경로 창조의 성격을 갖는 정책도 나타난다. 가칭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교원의 정치 기본권 확대, 생태전환교육 등이 이에
 해당한다. 거점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재정 지원을 과감하게 증액하고, 지역 살리기의 중심 역할을 대학이 할 수 있는 모델을
 2026년도에 본격 추진한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만큼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극도로 제한한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단계적으로 교원의 정치 기본권 확대를 도모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에 대해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하기 때문에 학교 밖, 직무 무관, 단계적 접근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문재인 정부 때 교육부 내에 민주시민교육과가 설치되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해당 조직이 폐지된 바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민주시민교육과가 다시 부활하면서 헌법교육, 선거교육, 미디어 문해력, 기후위기대응 및 생태전환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학교에 태양광 설비와 같은 대체 에너지 시설을 구축하여 기후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방안도
 발표하였다. 이는 단순히 하드웨어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전환교육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함께 강화하여 시설과 가치,
 철학, 교육과정 등을 연계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소멸위기 지역을 어떻게 살리고, 교육이 여기에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의식은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의 핵심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거점 국립대를 육성하면서 지역에 주요 기업을 유치하여 궁극적으로 지방의 인재가 지방을 떠나지 않고 지방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으로 이어지겠다는 정책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흐름은 의대 정원 배정과도 연결되는데, 거점 국립대와 지방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추가 배정하였다. 특히,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다. 지역이 주도하는 맞춤형 교육 혁신을 통해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정책 방향이다. 규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하고, 교육특구를 통해 재정 지원을 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학교 모델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작은 학교를 살리겠다는 주체들의 노력도 인정을 하면서도, 1교 다캠퍼스형 모델이나 통합운영학교 모델 등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교육개혁의 과제와 방향

다음과 같은 교육개혁의 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보다 큰 포부와 비전을 담아낸 교육개혁안을 준비하고 실행하자. 현 정부 출범 이후 과감한 교육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실 우리는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에 발표한 '5·31 교육개혁안'의 큰 틀에서 아직 벗어나지는 못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여 중장기발전방안을 수립하고 있지만, 교육개혁의 목표와 비전, 포부를 보다 크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5·31 교육개혁안을 대체하겠다는 각오와 구체적인 전략, 내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예컨대, 입시 중심의 교육 담론을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담론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수능과 내신 제도의 개편도 중요하지만, 수능과 내신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제2, 제3의 경로를 통해 도전할 수 있는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보장 경로가 계속 담보되어야 한다. 게임의 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단이 필요하다.

둘째, 잃어버린 교육과 학교의 기본기를 먼저 회복해야 한다. 교육개혁이라는 망원경 못지않게 교육혁신이라는 현미경도 필요하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위기의 징후가 많이 보인다. 서울의 S초등학교 사건 이후 교육활동 침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었으며, 교육의 입법화·행정화·사법화 경향 속에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서적·심리적 위기를 겪는 학생의 증가와 교사의 소진 현상은 교사들의 방어적 교육활동을 심화시킨다. 김성천(2024b:121)은 교사들의 방어적 교육활동을 “법적·행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불가피한 이유와 상황에 의해 소극적인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하려는 관점·태도·행동으로 인해 학교 교육력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이는 다시 학부모의 불신과 대립으로 이어지면서 학교 공동체가 붕괴될 수 있다.

사교육과 시가 융성한 시대에 “학교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에 관한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공교육의 대답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 지식 전달 수업이라든지 입시에 대비한 문제 풀이 수업이 아니라 깊이 있는 학습, 의미와 통찰을 얻는 학습 활동, 질문과 토론이 있는 교실, 학생들의 주도성을 발현시키는 교육과정, 자기만의 고유한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독서와 글쓰기, 특정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도전적 프로젝트 활동,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해 보려는 사회 참여 활동 등을 실현할 때 학교의 존재 이유를 학부모와 학생들은 스스로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부의 AI 정책은 단순히 AI에 관한 기능과 지식 습득에 초점을 두기보다 더욱 근본적으로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의 총체적 혁신을 도모한다. 교육부 문서에 독서, 토의토론, 논술형 평가, 질문 등을 유달리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사실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는 이미 중요성이 강조되었던 내용들이었는데, 입시 중심 구조 속에서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다. 이제는 고입이나 대입을 위해 유보하기보다, 학생들이 현재의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깊이있는 학습을 누리고 배우고 경험해야 한다.


셋째, 대입제도의 개편을 준비해야 한다.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90만 명이 넘는 수험생들이 수능에 응시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40만 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 수 감소와 함께 학생 모집이 어려움을 겪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상대 평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동시에, AI 시대에 5지선다형 중심의 평가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형태의 대입전형을 본격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대입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주요 논의를 종합해보면, ① AI를 활용하여 수능에 논·서술형 평가를 도입하자는 의견 ② 수시와 정시의 과감한 통합(고등학교 3학년 2학기의 정상화를 목적으로 함) ③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 등으로 압축된다. 대입 정책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영역이지만, 대학의 자율성 보장,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경감, 학생과 학부모의 과도한 부담 완화 등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계해야 한다. 이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중장기발전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능의 논·서술형 평가 도입이나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독서교육, 토의토론, 글쓰기 활동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지도할 수 있는 교사들의 역량이 요구된다. 또한,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을 위해서는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교사들의 전문성 확보와 함께 내·외부적인 평가의 질 검증 체계도 필요하다. 대입 제도 개편은 ‘마땅히 해야 한다’는 당위의 문제를 넘어, 그것을 위해 ‘누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전략의 문제를 내포한다.

넷째, 고등교육의 과감한 혁신과 개편이 필요하다. 그동안 고등교육은 상대적으로 시장 중심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대입 설립 준칙주의에 따라 무수히 많은 대학이 설립되었으나,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학이 무너지면 지역의 생태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영역이 아닌 공공의 영역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립대학이 국립대학보다 비중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계 대학 내지는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조정 논의와 함께 투명성과 공공성, 윤리성이 담보된 대학을 중심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크다.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과 경제를 살리는 연계 체계를 구축하려는 다양한 시도와 역대급 지원 정책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경우, 한정된 고등교육 재원을 거점 국립대, 국가중심대, 사립대, 전문대 등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의 문제도 제기된다. 단순히 대학 간 예산 나누어 먹기식으로 끝나서는 곤란하며 그 결과가 학생과 학부모, 기업들의 지방대 선호, 지역 정주율, 취업률, 대학의 세계적 경쟁력, 교육과정의 질적 혁신 등의 결과 지표의 제고와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또한, 학부 중심의 대학 모델에서 탈피하여 대학원과 연구소, 기업을 결합한 발전 모델이라든지 평생-직업교육의 중심에 있는 대학 모델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그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가는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이다.

이처럼 대학 서열화 완화, 지방대학 활성화, 대학 경쟁력 강화, 대학 혁신 모델 구축 등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앞으로 대학 혁신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학부 중심 대학 모델을 유지할 것인지, 대학원 중심 모델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선택이 요구된다. 또한, 연구 중심의 대학 모델을 추진할 때 지방의 대학원에 올 만한 학문 후속 세대의 확보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아울러 거점국립대학 중심의 지원 정책이 다른 국립대나 사립대학의 소외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RISE 체계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대학 네트워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며 협력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점검 역시 중요하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서울권 대학의 선호 현상을 잠재우고, 적어도 거점 국립대학이 충분한 선택지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 이처럼 해결해야 할 과제와 쟁점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과 지자체의 위기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점에서 혁신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다섯째, 지역 소멸을 대비한 거버넌스와 교육자치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간에는 통합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반복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연계와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우선 보여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사실 교육 분야에 대한 불만이 많은 편이다.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교육청에 제공하는 전출금이 14조 8천억 원(2025년 기준)에 달하지만, 시도지사나 시장이 지역에서 교육을 매개로 사업을 추진할 때 협조를 얻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향후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개편 논의도 본격화될 수 있다. 이는 교육 예산, 교원 수급, 교육시설 등에 새로운 전략 수립을 필요로 한다. 통합운영학교, 1교 다캠퍼스 모델, 단성 중고등학교의 통합 유도(남중, 여중, 남고, 여고) 등 다양한 학교 운영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내 중간지원조직과 같은 교육 관련 재단 설립, 학교 시설 복합화 등 다양한 정책 시도도 가능하다. 돌봄과 방과후 등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학부모나 지역 청년들을 교육과 지역의 자산으로 삼고, 아이들의 필요에 맞는 마을 강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폐교 시설을 예술과 문화, 복지, 문화 공간으로 과감하게 탈바꿈 하는 방식도 지역 교육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나가며

우리 교육이 이대로는 안 된다며 교육개혁의 당위성을 목소리 높여 외치기는 쉽다. 하지만, 교육개혁이 말하는 방향이 실제로 구현되기 위해서 우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무엇을 혁신하고, 실천할 것인가? 모두의 성찰과 실천이 전제될 때 비로소 교육개혁은 가능하다. 정책과 현장, 이상과 실천의 간극을 메우려는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들이 필요하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비교하며 서열화하려는 제도와 관습, 그리고 문화에서 벗어나는 일, 표준화와 획일화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화의 가치를 인정할 때, 특정한 성과를 낸 소수만을 우대하려는 관점에서 벗어날 때, 수도권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다극화를 도모하며 지방의 소외 현상을 이해하려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교육개혁의 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성천(2024). 윤석열 정부의 10대 교육개혁 정책의 변동 유형과 특성 분석: 문재인 정부 정책의 단절과 계상의 관점을 중심으로, 교육정치학연구 31(3), 43-87.

김성천. (2024b). 교사들의 방어적 교육활동의 양상과 비판적 성찰-서이초 사건 전후의 흐름을 중심으로-. 교육비평, 119-177.





세계의 교육

중국의 교육정책을 들여다보다

이성실(가천대학교 초빙교수)

인식론적 형평성과 포용적 교육을 위한 정책적 실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인종학(Ethnic Studies) 교육과정

김태연(네브라스카 주립대학교 링컨 캠퍼스 부교수)

중국의 교육정책을 들여다보다

이 성 실(가천대학교 초빙교수)



교육으로 강국을 꿈꾸다

“교육이 흥하면 나라가 흥한다(教育興則國家興).” 중국 시진핑 주석이 전국교육대회에서 반복해서 강조해 온 이 말은, 오늘날 중국 교육정책의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025년 1월 19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교육강국건설계획요강

(教育強國建設規劃綱要, 2024-2035)」을 공동 발표했다 (中共中央·國務院, 2025). 1949년 신중국 성립 이래 중국 역사상 최초로 교육 강국 건설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다.

이 문서는 단순한 교육 개혁안에 그치지 않는다. 교육,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통합하려는 중국의 거시적 구상을 담고 있다. 이는 2035년까지 중국을 '세계 교육 중심국'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인 동시에,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자립적인 인재 양성'으로 승부를 걸겠다는 전략적 선택이다.

이 글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 교육의 흐름을 복기하고, 쌍감 정책과 AI 교육 의무화가 시행 중인 현재를 진단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강국 2035' 및 제15차 5개년 계획에 담긴 중국 교육의 내일을 차례로 살펴본다.

개혁·개방이 열어젖힌 교육의 시대

중국 현대 교육의 중요한 전환점은 1978년 덩샤오핑(邓小平)의 개혁개방(改革开放) 선언이다. 문화대혁명(1966~1976) 기간 10년 동안 봉쇄됐던 대학이 다시 문을 열었고, 중단됐던 대학입학시험인 '가오카오(高考)' 1977년에 재개되었다. "과학기술은 제1 생산력(科学技术是第一生产力)"이라는 기치 아래 교육은 국가 근대화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1986년에는 「의무교육법(义务教育法)」이 제정되어 9년 의무교육 체계가 법적으로 확립됐고,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전국 농촌과 서부 내륙에 학교가 세워졌다. 2006년 의무교육법 개정으로 의무교육 단계 수업료와 잡비가 전국적으로 공식 폐지되면서, 사실상 9년 무상교육이 실현됐다(全国人民代表大会, 2006).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도 눈부셨다. 1999년 시행된 대규모 대학 정원 확장 정책(扩招, 쿼자오) 이후 대학 진학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동시에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211공정(211工程, 1995년)'과 '985공정(985工程, 1998년)'을 잇달아 추진했다. 이는 베이징대학(北京大学)·칭화대학(清华大学) 등 주요 대학을 세계 정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국가적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약적 성장의 이면에는 한계와 부작용도 공존하였다. 도시와 농촌, 동부와 서부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심화됐고, 가오카오를 향한 과열 경쟁과 사교육 부담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내 아이가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 심리는 중국 가정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았고, 이러한 교육 과열 양상은 이후 중국 교육정책이 대대적인 방향 전환을 꾀하게 된 씨앗이 됐다.

'쌍감(双减)' 정책: '덜어내기'의 교육실험

과중한 교육 부담과 저출산 위기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쌍감(双减)' 정책이다. 2021년 7월, 중공중앙판공청과 국무원판공청은 「의무교육단계 학생의 숙제 부담 및 교외 교육 부담 경감에 관한 의견(关于进一步减轻义务教育阶段学生作业负担和校外培训负担的意见)」을 공동 발표했다(中共中央办公厅·国务院办公厅, 2021). 이른바 '쌍감(双减, 두 가지를 줄인다)' 정책이고, 학교 안 숙제 부담과 학교 밖 사교육 부담을 동시에 경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책의 핵심 조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1~2학년의 서면 숙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3~6학년은 하루 60분 이내로 제한했다.

둘째, 의무교육 단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과 학원의 비영리 전환을 의무화하고 신규 설립을 금지했다.

셋째, 전국 20만 개 이상의 의무교육 학교에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中共中央办公厅·国务院办公厅, 2021).

정책 시행 이후 의무교육 단계 교과 학원 수가 급격히 줄었고, 학생들의 수업 후 과외 시간도 감소하는 등 표면적인 성과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현실은 복잡하다. 사교육 수요 자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형태가 변형됐다. 일부 학원은 '사회정서교육', '예·체능 강화' 등 비교과 영역으로 전환하며 여전히 운영 중이고, 개인 과외가 늘었다는 보고도 나왔다. 이에 「교육강국건설계획요강」은 “교과 학원을 엄격히 억제하고, 비교과 학원을 규범화”하는 기조를 지속 천명하며, 학교 교육의 주진지(主阵地) 역할 강화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中共中央·国务院, 2025).

AI 교육 의무화: '새로 채우기'의 국가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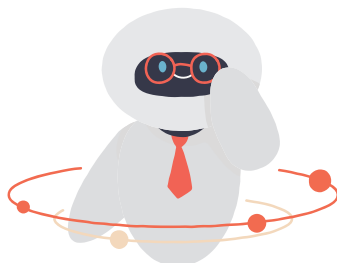
쌍감 정책으로 학습 부담을 줄이는 한편, 중국은 인공지능(AI)이라는 새로운 내용을 교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특히, 2025년은 중국 AI 교육의 원년(元年)이라 불려도 과언이 아니다. 2025년 5월, 중국 교육부 기초교육교학지도위원회는 「중소학교 인공지능 통식교육지침(中小学人工智能通识教育指南, 2025年版)」을 공식 발표했다(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2025a). 이에 따라, 같은 해 9월 가을학기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AI 통식교육이 전면 실시되었으며, 학년당 최소 8교시 이상의 이수가 규정됐다.

곧이어 2025년 10월, 교육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과학기술부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중소학교 과학기술교육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强中小学科技教育的意见, 教基[2025]7号)」을 발표하였다. 이 문건은 2030년까지 중학교 과학기술교육 체계를 기본적으로 구축하고, 2035년까지 과학기술교육 생태계를 전면 완성한다는 단계별 목표를 담았다(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等七部门, 2025).

학교급별 AI 교육 내용은 뚜렷한 단계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2025a).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AI 기기와의 상호작용 체험, 음성인식·이미지 분류 등 기초 기술 인지, 간단한 비주얼 프로그래밍을 통한 흥미 유발에 초점을 맞춘다. 중학교에서는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의 기본 흐름과 지도학습 개념을 이해하고, 지능형 에이전트 구축을 통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형 학습이 이루어진다. 고등학교에서는 생성형 AI의 기술적 특성과 사회적 영향, 국방·안보 등 국가 전략과의 연계, 인공지능 알고리즘 모델 구축과 최적화까지 깊이 있게 다룬다. 요컨대 초등에서 고등까지 '체험 → 이해 → 창조'로 이어지는 정교한 단계적 역량 체계를 구축하는 구조다.

이 정책은 갑작스러운 전환이 아닌, 지난 8년간의 치밀한 국가 전략의 산물이다. 2017년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 国发[2017]35号)」에서 “초·중·고에 AI 관련 과목을 신설하고 프로그래밍 교육을 보급한다”는 방향을 제시했고(国务院, 2017), 2024년에는 「교사 인공지능 소양 향상 행동 계획(教师人工智能素养提升行动计划)」으로 교원 양성에 본격 착수했으며(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2024b), 2025년에 이르러 본격적인 전면 실행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물론 현장 과제도 적지 않다. 농촌과 서부 내륙 지역의 디지털 인프라 격차와 전문 AI 교사의 절대적 부족은 AI 교육 보편화의 가장 큰 장벽이다. 중국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 스마트교육플랫폼(国家智慧教育公共服务平台)을 통한 온라인 원격 교육 콘텐츠 보급, 도농 결연 프로그램, 기업·대학 실험실의 학교 개방 등 다각적인 보완책을 병행하고 있다(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2025a).



‘교육강국 2035’ 청사진

2025년 1월 발표된 「교육강국건설계획요강(2024~2035년)」은 단순한 교육 계획이 아니라 ‘교육·과학기술·인재 일체화 발전’이라는 국가 전략의 핵심 축이다. 계획은 두 단계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1단계(2027년까지)는 교육의 보급 수준과 질을 높여 고품질 교육 체계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고, 2단계(2035년까지)는 기초교육 수준을 세계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리고 ‘학습형 사회’를 전면 형성하는 것이다.

주요 과제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교육의 균형적 발전이다. 도농 격차 해소를 위해 소규모 농촌 학교의 여건을 개선하고, 장애 아동과 이농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강화한다. 2025년 가을학기부터는 공립 유치원大班(大班, 만 5세) 아동에 대해 보육·교육비를 전액 면제하는 무상 유치원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약 1,200만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둘째, 고등교육의 질적 고도화이다. ‘쌍일류(双一流)’ 정책이 확대되어 입학 정원을 38,000명 늘리고 전략 분야(인공지능·반도체 등) 중심으로 학과를 전면 재편하였으며, 2024년 한 해에만 1,673개 전공을 신설하고 1,670개를 폐지하는 등 구조 조정이 이루어졌다.

셋째, 직업교육의 현대화이다. ‘쌍고(双高) 건설’ 2단계 계획을 통해 국가급 기능형 고등직업학교 220개를 구축하고, 34개 시·지역에 산학 연합체를 설립한다. 현재 직업대학은 전체 신규 고급 기능인력 공급의 70% 이상을 담당한다.

넷째, 교육 개방과 국제 협력 강화이다. 향후 3년간 국제 여름학교 프로그램 800개를 개설하고, 5년간 미국 청소년 5만 명, 3년간 프랑스 청소년 1만 명을 초청하는 교류 사업을 추진한다(中共中央·国务院, 2025).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과 교육의 미래 설계

2026년 3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된 「제15차 5개년 계획 강요 초안(十五五规划纲要草案)」은 교육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목표를 제시하였다(新华社, 2026). 가장 주목할 만한 대목은 의무교육 연한 연장 검토이다. 현행 9년 의무교육 체계를 확장하는 방안을 탐색하겠다는 것으로, 유치원 교육이나 고등학교 단계를 의무교육에 포함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무상교육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담겼다.

구체적인 수치 목표도 제시되었다. 노동 연령 인구의 평균 교육 연한을 현재 11.3년에서 2030년까지 11.7년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로 설정되었으며, 고등교육 총취학률 역시 지속적으로 높여 65%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향이 제시되었다. 또한 농촌·중서부 지역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우수 일반 고등학교 1,000개를 신설·증축하는 계획도 포함되었다. 교육부 장관 화이진펑(怀进鹏)은 15차 5개년 계획 교육 방향을 “인구 변화에 부응한 자원 배분 체계 정비”와 “교육·과학기술·인재 일체화 발전”으로 요약하였다(新华社, 2026).

교육 강국의 꿈, 사람에서 시작된다

현재 중국은 ‘교육강국 2035’라는 국가적 비전 아래, 학습 부담을 줄이면서도 미래 역량을 키우고, 세계를 향해 문을 열면서도 자립 인재를 양성하려는 복잡한 균형 위에서 거대한 교육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개혁의 규모와 속도 면에서 중국의 사례는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하기 어렵다. 14억 인구를 대상으로 한 정책 실험은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드러내며, 그 과정 자체가 전 세계 교육계에 값진 데이터가 된다.

중국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큰 규모의 교육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사교육 시장을 규제하고, AI 교육을 의무화하고, 유치원 무상교육을 도입하고, 의무교육 연한 연장을 논의하는 이 모든 변화가 불과 몇 년 사이에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그 속도와 규모는 놀랍지만,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방향이다.

첫째, ‘국가 교육 전략’의 일관성과 장기성이다. 2017년 AI 발전 계획을 세우고 2025년에 전면 시행에 이르기까지 8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했다. 교사 양성, 교육과정 개발, 디지털 인프라 구축, 평가 체계 개편이 단계적으로 맞물렸다. 교육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흔들리는 환경에서는 이런 ‘긴 호흡’이 어렵다.

둘째, ‘덜어내기’와 ‘채우기’의 전략적 병행이다. 쌍감 정책으로 과도한 학습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AI 교육 의무화로 미래 역량을 더했다. 표면적으로는 상반된 정책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둘은 같은 목표를 향한다. ‘시험 중심의 지식 주입’에서 벗어나,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역량 함양’으로 교육의 축을 옮기는 것이다.

셋째, 교육 격차 해소는 어디서나 가장 어려운 숙제다. 중국이 AI 교육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부딪히는 문제는 도농 간·지역 간 디지털 인프라 격차다. 정책 의도와 현장 실행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핵심 과제다. 새로운 정책이 기존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취약 계층·소외 지역에 대한 세밀한 배려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보편적 교훈이다.

넷째, AI 교육의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국에서도 AI 교육 의무화 이후 사교육 시장이 ‘AI 코딩 학원’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기술 습득이 또 하나의 입시 스펙으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AI 교육의 본질은 코딩 기술 숙련이 아니라 논리적 사고력, 창의적 문제 해결력, 비판적 리더러시의 함양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중국의 교육 개혁은 지금 이 순간도 진행 중이다. ‘교육강국 2035’라는 깃발 아래, 학습 부담을 줄이면서도 미래 역량을 키우고, 세계를 향해 문을 열면서도 자립 인재를 양성하는 복잡한 균형 위에서 거대한 교육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14억 인구를 대상으로 한 정책 실험은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드러내며, 그 과정 자체가 전 세계 교육계에 값진 데이터가 된다. 🏠

참고문헌

- 国务院 [2017]. 新一代人工智能发展规划 (国发[2017]35号).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7/20/content_5211996.htm
- 国务院办公厅 [2025]. 关于逐步推行免费学前教育的意见. 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 <https://www.gov.cn>
- 全国人民代表大会 [2006]. 中华人民共和国义务教育法 (2006年修订). 全国人民代表大会. <http://www.npc.gov.cn>
- 新华社 [2026]. 中华人民共和国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五个五年规划纲要. 新华社. <https://english.news.cn/20260307/a13ef450715448569141d38841ff713a/c.html>
- 中共中央·国务院 [2025]. 教育强国建设规划纲要 (2024—2035年).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http://www.moe.gov.cn/jyb_xgk/moe_1777/moe_1778/202501/t20250119_1176193.html
- 中共中央办公厅·国务院办公厅 [2021]. 关于进一步减轻义务教育阶段学生作业负担和校外培训负担的意见 (中办发[2021]40号).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http://www.moe.gov.cn>
-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2024a]. 双减政策实施三周年工作情况.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http://www.moe.gov.cn>
-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2024b]. 教师人工智能素养提升行动计划.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http://www.moe.gov.cn>
-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2025a]. 中小学人工智能通识教育指导纲要 (2025年版). 教育部基础教育教学指导委员会. <http://www.news.cn/government/20250512/0f9f225c783f481ba0aec9d08751eadd/c.html>
-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2025b]. 2025年全国教育事业统计公报.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http://www.moe.gov.cn>
-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等七部门 [2025]. 关于加强中小学科技教育的意见 (教基[2025]7号). 中华人民共和国教育部. http://www.moe.gov.cn/srcsite/A06/jcys_jyzt/202511/t20251111_1419878.html

인식론적 형평성과 포용적 교육을 위한 정책적 실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인종학 (Ethnic Studies) 교육과정

김 태 연(네브라스카 주립대학교 링컨 캠퍼스 부교수)



교육과정의 정치학과 인식론적 불평등 해소

교육과정 개혁은 “어떤 지식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다음 세대가 살아갈 미래의 지식 기반을 검토하고 선별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일은 어떤 종류의 지식에, 그리고 누구의 지식에 공식적 지위를 부여하는가를 둘러싼 정치적 쟁점을 수반한다. 교육과정 정책 결정은 여러 옹호연합 및 압력단체들이 서로 다른 가치를 제안하는 상황 속에서 법률상 책임이 있는 정부 또는 지역공공기관들이 수용과 거부, 적절한 협의 등을 통해 의사 결정을

이행하는 정치적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McNeil, 1990; Priestley & Philippou, 2018). ‘공식적’ 지식으로 규정된 학교교육과정은 한 사회 내 권력관계의 역학을 반영하며, 엘리트나 문화적 주류 집단의 규범을 보존하고 재생산하는 기제로 작동하기도 한다(Apple, 2012). 따라서 교육과정 정책은 사회적 지위나 배경에 따라 특정 집단의 지식과 경험이 체계적으로 배제되거나 왜곡되는 ‘인식론적 불평등’(Fricker, 2007)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26년 교육부는 교육불평등 해소와 포용적 교육 강화를 중점 과제 중 하나로 내세웠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교교육이 인식론적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지식 토대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 2025-2026년부터 시행 중인 주정부 수준의 '인종학(Ethnic Studies)' 교육과정 정책을 소개하고, 그 정책적 시사점을 논하고자 한다. 정책이란 단순히 법안으로 명문화된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하는 '담론'과 구체적인 '실천'이라는 다양한 층위를 통한 이해가 필요하다(Kim, 2023a). 정책을 보는 다양한 접근에 근거하여(Kim, 2023a) 캘리포니아 인종학 정책의 (1)필요성 및 개요, (2)역사적 배경, (3)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쟁점 및 (4)정책적 실천에서 드러나고 있는 가능성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인종학의 개념 및 정책 개요

인종학(Ethnic Studies)은 사회적으로 '인종화된' 집단(racialized groups, 주로 유색인종과 원주민)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뿐만 아니라 권력, 차별 및 저항의 구조를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다(Sleeter & Zavala, 2020). 주요 연구 주제로는 사회적으로 인종화가 일어나는 과정, 구조적 인종주의(structural racism), 탈식민주의(decolonization)와 디아스포라(diaspora), 교육 및 이민 정책과 불평등, 정체성과 저항 운동 등이 포함된다(Sleeter & Zavala, 2020). 인종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의 공교육은 백인 중심·유럽 중심의 지식과 세계관에 의존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과정은 유색인종 학생의 역사·지식·경험을 지속적으로 주변화(marginalization)한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인종학을 연구하는 비판적 학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단순한 대표성(representation) 부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인종주의(structural racism)의 산물로 정의한다. 즉, 교육과정의 문제를 '다양성 부족'이 아니라 '지식 권력의 불균형'으로 진단하며, 제도와 권력 구조의 개혁을 촉구한다(Third World Liberation Front Research Initiative, n.d.; Sleeter & Zavala, 2020; Wright, 2025).

캘리포니아는 미국의 여러 주 중에서도 인구 구성이 매우 다양하다. 캘리포니아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4-2025학년도 기준으로 총 5,806,221명이 유·초·중·고(K-12) 학교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다. 인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히스패닉 또는 라티노 학생이 56.1%로 가장 비율이 높고, 이어 백인 20.0%, 아시아인 10.1%, 흑인 4.9%, 둘 이상의 인종이 섞인 학생이 4.8%, 필리핀계 2.2% 등으로 다양한 구성을 보인다(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DataQuest, 2025).

학생의 인구학적 배경에 부합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혁으로 캘리포니아는 2021년 10월 주 하원 법안 Assembly Bill 101(이하 AB 101)을 통과시켜 인종학을 고등학교 졸업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였다(AB 101, 2021).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공립 고등학교가 2025-2026학년도부터 최소 1학기 이상의 인종학 과목을 제공하고, 2030년 졸업생부터 이를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규정하였다. 법안의 취지는 학업 성취도 격차를 해소하고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주정부 차원에서 인종학을 고교 필수 요건으로 마련한 법안은 미국 최초의 결정으로 캘리포니아의 AB 101은 포용적 교육과정을 위한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는 교육품질위원회(Instructional Quality Commission)와 주 교육위원회(State Board of Education)가 주관한 인종학 모델 교육과정(Ethnic Studies Model Curriculum, ESMC)의 개발이 있었다(Wright, 2025). 이 과정에서 한인 학자들과 교육자들을 중심으로 미국 한인의 역사 및 공동체적 경험을 다루는 교육 자료가 다양한 경로로 개발되고 공유되기도 하였다(김형재, 2025). 주정부 차원에서 모델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채택하였지만, AB 101은 교육청과 같은 지역 수준에서 자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였다. 한편, 법안 통과 직전 의회에서는 AB 101에 재정 조건부 조항을 추가하게 되는데, 주 의회가 해당 연도 예산에서 정책을 위한 특정 자금을 배정할 때만 교육과정의 의무화가 효력을 갖는다는 요건이었다(Janov, 2021).

역사적 배경 및 토대: 미국의 시민권 운동 및 대학 교육과정 개편

캘리포니아의 인종학 관련 법 제정의 기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시민권 운동(Civil Rights Movement)과 이에 따른 고등교육 개혁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민권 운동은 미국 사회에 만연했던 인종 차별과 억압을 종식하고 동등한 법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1950-1960년대에 걸쳐 전개된 대규모 인권운동이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Martin Luther King Jr.) 목사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의 끈질긴 비폭력 저항 끝에, 1960년대 미국은 고용, 교육, 공공장소 등에서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였으며, 인종에 따른 투표권 제한을 철폐하였다. 또한, 미국 교육 정책 논의에서 자주 언급되는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판결(Brown v. Board of Education, 1954), 즉 연방 대법원이 공립학교 내에서의 흑백 인종 분리를 위헌으로 판결한 기념비적인 사건 또한 하나의 결실로 볼 수 있다(Klarman, 2007).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시민권 운동은 대학 캠퍼스 내의 '교육과정 개편' 요구로 확장되었다. 당시 흑인, 라틴아메리카계, 아시아계 미국인 등을 포함한 유색인종 학생들은 대학의 학문과 교육과정이 자신들이 살아온 역사와 현실을 대변하지 못하고 철저히 유럽적 사고 및 지식적 토대에 기반하고 있으며 백인 중심적이라고 비판했다(Sleeter & Zavala, 2020). 1968년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교에서는 흑인학생연합(Black Student Union), 라틴아메리카학생조직(Latin American Students Organization), 아시아계 미국인 정치연합(Asian American Political Alliance), 필리핀계 미국인 대학생단체(Pilipino American Collegiate Endeavor), 그리고 원주민학생연합(Native American Students Union)이 연대하여 '제3세계 해방전선(Third World Liberation Front)'을 결성하였다. 이들은 인종학 단과대(School of Ethnic Studies) 설립을 요구하며 미국 역사상 가장 긴 학생 파업을 단행했다(Ehsanipour, 2024). 이 운동은 캘리포니아 주립대 버클리 캠퍼스로 확산되었고, 그 결과 1969년 3월 UC 버클리는 미국 최초의 인종학 학과(Ethnic Studies Department)를,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교는 전국 최초의 인종학 단과대학(College of Ethnic Studies)을 설립하게 되었다.

이후 인종학 관련 학과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간학문적 형태로 발전해 왔다. 오늘날 인종학은 미국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유색인종 공동체 형성 과정과 관련 경험에 대한 비판적 통찰과 지식 및 비판적 연구를 제공하는 중요한 학문 분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 부리를 둔 캘리포니아의 인종학 정책은 민주주의 심화, 시민교육 강화, 형평성(equity) 실현 및 학업 성취 향상을 목적으로 K-12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쟁점

해당 정책을 옹호하는 이들은 인종학 관련 선행 연구들이 보고한 긍정적 교육 성과를 주요 근거로 제시한다. 연구에 따르면 인종학 교육과정은 학생의 정체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업 성취를 높이며, 민주적 시민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과 주체성을 기르는 데 폭넓은 이점이 있다(Kolluri & Edwards, 2023; Tintiangco-Cubales et al., 2015; Sleeter & Zavala, 2020). 하지만 기존에 실행된 초·중등 교육에서의 인종학은 커뮤니티나 풀뿌리 운동을 통해 단위 학교나 교육청 또는 학교 밖 교육공동체를 통해 제공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종학 교육과정의 제도화를 둘러싼 논의는 인종학을 지지하는 집단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 차이를 보인다. 특히, 인종학 탄생 배경에 근거한 근본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룹에서는 주정부 차원의 제도화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의 충돌과 타협이 개입될 경우를 우려하였다. 즉, 사회 정의, 지식의 탈식민화, 연대를 향한 해방적 교육과 같은 인종학이 기반해야 할 원칙적인 가치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Wright, 2025).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의 인종학 입법과정은 미국 여러 주의 상황과 유사하게, 교육과정을 통제하려는 주정부의 강도 높은 검열을 수반했다. 특히 인종학 모델 교육과정 승인 과정에서는 여전히 유럽 중심적 관점을 유지하고 교차적 억압의 경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Wright, 2025).

대표적인 예로, 2020년 이전에 인종학을 필수화하려 했던 하원 법안이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것을 들 수 있다. 당시 인종학의 근본적 가치에 근거해 제시되었던 모델 교육과정 초안은 유대계를 중심으로 한 단체로부터 반유대주의 및 반자본주의 편향성 논란을 일으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주지사는 해당 초안의 균형성과 포용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대대적인 수정을 요구했다(Trackbill.com). 이후 수정 과정을 거쳐 2021년에 통과된 법안 AB 101은 다음과 같은 특정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포용성, 모든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성적 지향 및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 적합해야 한다.

둘째, 차별 금지, 특정 대상 그룹에 대한 편견, 심한 편협성, 차별을 직간접적으로 반영하거나 조장해서는 안 된다.

셋째, 종교적 중립성, 특정 종교의 교리를 가르치거나 장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최종 채택에 이르기까지 인종학 모델 교육과정이 여러 차례의 수정 과정을 거쳤다는 사실은 정책 결정 과정이 매우 역동적이면서도 참여한 갈등을 동반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책 실행에서 드러난 문제점 및 가능성

2025년 기준으로 미국 내 26개 주가 인종학 교육과정의 기준을 마련하거나 실행을 법안에 명시하고는 있으나(Committee of 100, 2025), 주정부 차원에서 졸업 요건으로 모든 고등학교의 의무화를 강제할 결정은 캘리포니아 주가 최초이다. 정책 시행이 결정된 이후 캘리포니아의 많은 교육청에서는 인종학 교육과정 도입을 위해 단계적인 준비를 해왔다. 그러나 해당 정책은 실행 1년 차부터 예산이 승인되지 않아 전면 실행을 유보하게 되었다(김형재, 2025). 2024-2025 회계연도에 캘리포니아주는 막대한 세수 부족으로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했으며, 이러한 경제적 현실은 결국 AB 101 전면 시행을 위한 예산 누락으로 이어졌다(Fensterwald, 2024). 상원 세출위원회는 교사 채용, 훈련 및 교재 구매 등에 연간 약 2억 7,6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으나,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2025-2026년 주 예산안에는 인종학 도입을 위한 자금 전액이 누락되었다(Fensterwald, 2024; Janov, 2025). AB 101 법안이 명시한 '예산 배정 시에만 효력 발생' 조항에 따라, 2025-26학년도부터 인종학 과목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법적 요구 사항은 사실상 무효화 및 유보되었다(Janov, 2025).

이에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교육청은 혼란에 빠졌고, 인종학 교육과정의 실행은 해당 지역의 교육구에서 가용한 자원과 정치적 의지에 따라 양극화된 상황이 되었다. 정책 시행을 강행하고 있는 학교구는 약 25%로, 전체 고등학교의 약 4분의 1이 자체 예산을 투입해 인종학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Janov, 2025). 실제로 샌프란시스코 통합 교육구나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같은 대규모 교육청은 인종학 교육과정을 오랫동안 자체적으로 도입해서 가르치고 있으며, 교사들에게도 관련 자료를 배포하여 수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Zaske, 2025). 반면, 재정적 여유가 없는 소규모 교육구나 백인 중심 지역사회의 반발이 심한 학군에서는 주정부의 재정 미지원을 근거로 인종학 관련 교육 활동을 중단하거나 선택 과목으로만 축소 운영하고 있다.

한편, 누가 해당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도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이다. 2026년 현재 캘리포니아주에는 인종학 수업을 위한 교사 자격증이 없고, 기존 사회과학 관련 교과 교사 등이 인종학을 가르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의회에서는 법안을 통해 인종학 단일 과목 자격증에 필요한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UC 버클리 등 주요 대학에서 교사들을 돕기 위해 인종학 교육학 인증 프로그램과 여름 연수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공백을 메우고 있다.

교육 정책 입안과 실행을 위한 시사점

미국 캘리포니아의 인종학 교육과정 정책 결정과 실행 사례는 교육과정 개혁이 정치·경제적인 영향력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첫째, 오랜 시간 논의와 합의를 통해 통과된 법안이 결정적으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전면 시행이 중단되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야기한 점은 예산 결정과 집행을 담당하는 정책 관료 및 정치인들이 가져야 할 막중한 책임감을 상기시킨다. 정책 결정자들은 입법을 앞두고 재정 관련 조항을 드러나지 않게 추가하였고(Janov, 2025), 실제 정책 시행을 앞둔 시점에도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오랫동안 논의해 온 '다양성과 포용성을 위한 교육'이라는 가치를 저버렸다. 이는 교육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이들에게 단순한 법적, 행정적 절차에 관한 책무성이 아닌, 공동체 책무성(community accountability)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Kim, 2023b).

둘째, 지역 수준의 풀뿌리 운동이 교육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주정부(또는 국가) 수준에서 제도화될 때, 추구하는 가치의 우선순위와 자율성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숙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캘리포니아 인종학 정책은 학교 교육의 '포용성'이라는 가치를 전면에 내세워 갈등 조정과 타협 과정을 거쳐 입법화되었다.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개발과 활용은 개별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되, 가이드라인이 되는 지침은 법안에 명시하였다. 이러한 자율성은 교육구별로 다양한 학생 구성을 보이는 지역적 특성을 교육과정에 잘 반영할 수 있는 조치로 작동하였고 단위 학교 또는 교육청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특히, 정책의 전면 시행이 좌절된 상황에서도 일부 교육청은 지역 차원의 교육과정 개혁을 추진하며 정책 실행을 지속하려는 리더십을 보였다. 따라서 교육 현장의 리더들이 보다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교육과정을 실행하기 위한 비판적 이해와 실행 전략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반대로 주정부의 의무화 규정 효력이 없음을 근거로 정책 실행을 유보한 교육청이 75%나 된다는 사실은 정책이 추구하려고 했던 사실은 포용성이라는 가치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며, 정책적 실현이 정치적 결정에 따라 좌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다양한 이익집단의 가치 충돌을 비판적으로 잘 분석하고 전략적인 합의와 의사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 리더십’의 확보가 성공적인 정책 실현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의 인종학 정책은 우리에게 ‘인식론적 형평성’에 관한 고민을 던진다. 교육개혁을 시도할 때,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를 위해 필요한 질문은 ‘어떤 지식을 토대로 역사를 논하고, 미래를 그려갈 것인가’라는 것이다. 학생의 다양성에 관한 대한민국의 정책적 접근은 과거 ‘고교다양화 정책’과 같은 학교 유형의 다양화에서, ‘학생부종합전형’과 같은 입시제도의 변화를 거쳐, 최근에는 ‘고교학점제’와 같은 선택의 폭을 넓히고, ‘학생맞춤형통합지원’과 같이 학생의 개별적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형태로 진화해 왔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제도적 차원의 하드웨어적 개혁을 넘어 현재 학교 교육이 제공하는 지식적 토대가 과연 누구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지, 해당 학생과 지역사회의 삶과 역사를 ‘합당한’ 지식으로 수용하고 있는지, 또 어느 누군가의 인식론적 토대, 즉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사고하는 방식이 정책과 지침이라는 명목 아래 지속적인 소외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관해 질문하고 고민할 때, 불평등의 해소와 포용을 위한 교육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형재(2025, 10월 27일). 고교 인종학 수업, 법만 만들어진 채 좌초될 판. 미주중앙일보. <https://www.koreadaily.com/article/20251027204749608>
- AB 101, California Assembly Bill, 2021-2022 Regular Session (2021). <https://leginfo.ca.gov>.
- Apple, M. W. (2012). Education and power. Routledge.
- Brown v. Board of Education, 347 U.S. 483(1954), p. 1.
- Committee of 100 (2025).
- Ehsanipour, A. (2024). Ethnic Studies: Born in the Bay Area from History's Biggest Student Strike. Retrieved from <https://www.kqed.org/news/11830384/how-the-longest-student-strike-in-u-s-history-created-ethnic-studies>
- Fensterwald, J. (2024). As deadline looms, ethnic studies remains an unfunded mandate. What will Newsom do? EdSource. <https://stocktonia.org/news/education/2024/12/17/as-deadline-looms-ethnic-studies-remains-an-unfunded-mandate-what-will-newsom-do/>
- Fricke, M. (2007). Epistemic injustice: Power and the ethics of knowing. Oxford university press.
- Janov, L. (2025, July 7). As ethnic studies mandate withers, it's clear state leaders misled districts. EdSource. <https://edsource.org/2025/as-ethnic-studies-mandate-withers-its-clear-state-leaders-misled-districts/735901>
- Kim, T. (2023a). What is the meaning of educational leadership in a time of policy engineering? International Journal of Leadership in Education, 26 (1), 37-53
- Kim, T. (2023b). The human side of accountability: Dilemmas of reaching all learners. Harvard Educational Review, 93(3), 313-341.
- Klarman, M. J. (2007). Brown v. Board of Education and the civil rights movement. Oxford University Press.
- Kolluri, S., & Edwards, L. (2023). Ethnic studies: From counternarrative to curriculum. The Urban Review, 55(1), 50-69.
- McNeil, J.D. (1990). Curriculum: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Scott Foresman.
- Priestley, M., & Philippou, S. (2018). Curriculum making as social practice: Complex webs of enactment. The Curriculum Journal, 29(2), 151-158.
- Sleeter, C. E., & Zavala, M. (2020). Transformative ethnic studies in schools: Curriculum, pedagogy, and research. Teachers College Press.
- Tintiango-Cubales, A., Kohli, R., Sacramento, J., Henning, N., Agarwal-Rangnath, R., & Sleeter, C. (2015). Toward an ethnic studies pedagogy: Implications for K-12 schools from the research. The Urban Review, 47, 104-125.
- Wright, J. (2025). Critical ethnic studies and the global pursuit of justice. Teachers College Press.
- Zaske, S. (2025). What to know about ethnic studies in California high schools. Stanford Report. <https://news.stanford.edu/stories/2025/12/ethnic-studies-california-high-schools>

웹사이트

California Department of Education DataQuest.

<https://dq.cde.ca.gov/dataquest/dqcensus/EnrEthGrd.aspx?cds=00&aggllevel=state&year=2024-25> Committee of 100.

<https://www.committee100.org/our-work/k-12-asian-american-and-pacific-islander-and-ethnic-studies-in-the-united-states/>

Third World Liberation Front Research Initiative. <https://crg.berkeley.edu/third-world-liberation-front-research-initiative-twlf-trackbill.com>, accessed May 20, 2025,

<https://trackbill.com/s3/bills/CA/2021/AB/101/analyses/assembly-education.pdf>







교육현장 Report

농어촌 학교에서 피어난 내일의 꿈

김태우(춘양초등학교 교사)

삶을 과학으로 읽다

- 디지털 과학 숲(FOR-REST)

프로젝트로 미래 시민 과학자 양성하기

박진영(대전버드내중학교 과학 교사)

농어촌 학교에서 피어난 내일의 꿈

김 태 우(춘양초등학교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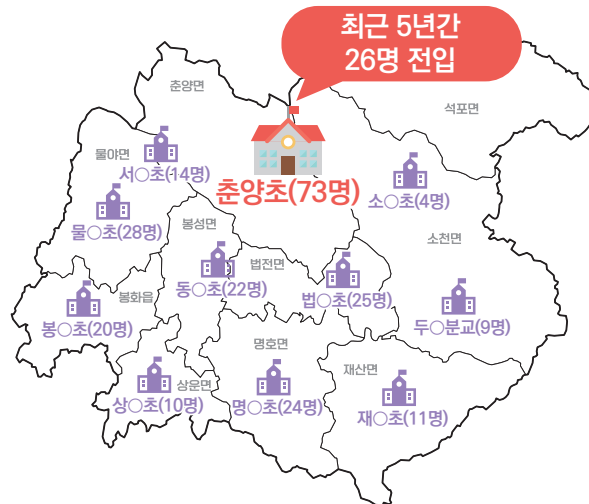
춘양초등학교 전경

경북 봉화군 농어촌 학교의 위기

경상북도 봉화군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의 위기를 직격탄으로 맞은 대표적인 지역이다. 2025학년도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에 따라 봉화군 내 전체 14개교 중 전교생 15명 이하인 5개교가 통폐합 대상으로 지정되는 등 지역 교육 생태계가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춘양초등학교는 봉화군 중심지에서 벗어난 외곽 지역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전교생 70명 이상(2025년 기준)의 규모를 유지하며 농어촌 학교의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있다.

춘양초등학교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학교,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마을 공동체가 협력하여 교육 모델을 구축한 점이 있다. 학교(Bombyeot), 지자체(Organization), 마을 공동체(Members)가 함께 힘을 모아 ‘온 마을 별(S.U.N: Study-United-New capability)’이라는 교육 모델을 구축한 것이다. 최근 5년간 26명의 전입생을 맞이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단순히 학생 수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대도시 못지않은 디지털 교육 환경과 마을 전체가 배움터가 되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춘양초는 SWOT 분석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였다. 풍부한 디지털 기기와 다목적 교실을 활용한 SW-AI 프로젝트 활동(SO 전략), 원어민 영어 캠프와 스쿨버스를 활용한 교외 학습(WO 전략), 마을 공동체와 함께하는 예술 발표회 및 국제교류(ST 전략), 그리고 AI 코스웨어를 통한 개별 맞춤형 교육(WT 전략) 등이 그 핵심이다. 또한, 2025년에는 특수학급 공간혁신과 미래형 컴퓨터실 환경 개선 사업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약 1억 원 이상 증액된 총 1억 6,0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더욱 탄탄한 교육 기반을 마련하였다.

[Study] 학생 맞춤형 배움으로 채우는 성장의 교실

춘양초등학교는 농어촌 학교의 강점을 살려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AI 코스웨어(AI Courseware) 활용 교육’은 본교의 교육과정의 핵심 자산이다. 저학년을 위한 ‘똑똑! 수학 탐험대’와 고학년을 위한 ‘AI 매일수학’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게임 형태의 흥미로운 학습 미션을 제공하고, 실시간 학습 리포트를 통해 학생 개별 취약점을 정밀하게 진단하여 보완한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를 인정받아 ‘제18회 디지털교육연구대회’ 학교경영분과에서 전국 최우수학교로 선정되었다.



[그림 1] AI 코스웨어 활용교육



[그림 2] 디지털 메이커 교육



[그림 3] 저학년 똑똑 수학 탐험대

영어 교육 역시 다문화 및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공지능 기반 영어 학습 프로그램인 '시 핑톡'을 도입하였다. 듣기와 말하기 중심의 콘텐츠 구성을 통해 기초 학력 부진을 해소하고, 학생별 취약 영역에 대한 집중 복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전교생에게 스마트워치를 보급하고 전문 웰니스(Wellness) 기기를 활용한 체형 불균형 검사를 실시하는 등 '맞춤형 퍼스널 트레이닝'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과학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림 4] 시핑톡 활용 영어교육



[그림 5] 스마트워치 활용 걷기 활동



[그림 6] 체형 불균형 검사

학생들의 주도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매년 4월에는 '맞춤형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생들은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를 바탕으로 기부 계획을 세우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재료를 활용해 포크레인 시범 운전, 베이킹, 웹툰 제작, 중국 무술 등 다채로운 재능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며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한다. 이와 함께 선후배가 짝을 이루어 온라인 독후감 작성을 돕는 '경북독서친구' 활동과 월 1회 열리는 '봄별 팝업 북스토어' 이벤트는 학생들이 책과 친해지는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7] 재능기부 - 웹툰 제작



[그림 8] 재능기부 - 중국 무술



[그림 9] 경북독서친구 활동

[United]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마을 교육 공동체

춘양초등학교는 학교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을 넘어, 마을 공동체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철학 아래 '함께하는 교육'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매년 학기 초에는 학생들이 직접 학교폭력 예방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후배들에게 교육하는 '학생 주도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펼치며, 9월에는 학생들이 주제 선정부터 진행까지 도맡아 하는 '봄별 콘서트'를 개최하여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그림 10] 학교폭력 자료 제작



[그림 11] 학생 주도 학폭 예방 활동



[그림 12] 봄별 콘서트

여름철 ‘물총놀이’와 ‘에어 바운스 축제’, 겨울철 강당에서 텐트를 치고 밤을 보내는 ‘1박 2일 강당 캠프’는 학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며 정서적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 또한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늘봄지원실장을 배치한 결과, 늘봄 참여 학생 수가 2024년 53명에서 2025년 73명 전원으로 확대되었으며, 방과후 수업 참여율 또한 93%라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림 13] 에어 바운스 축제



[그림 14] 1박 2일 강당캠프



[그림 15] 늘봄 참여 우수 학생 시상

지역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춘양초의 특징이다.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미래환경 체험센터, 목재 문화 체험관 등 지역 주요 시설을 활용한 생태전환교육을 전액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3대의 스쿨버스를 운행하여 원거리 거주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와 외부 체험 학습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 심화학교를 운영하며 봉화 소방서와 연계한 실질적인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부 사례발표에서 우수 학교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림 16] 목재 문화 체험관



[그림 17] 스쿨버스 차고지



[그림 18] 학생 주도 재난안전훈련

[New capability] 미래 역량을 키우는 에듀테크 및 글로벌 교육

춘양초등학교는 농어촌 지역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어(토론 요약), 사회(디지털 배낭여행), 과학(식물 일지), 음악(AI 작곡) 등 전 교과에 걸쳐 생성형 AI와 에듀테크 도구를 도입하여 수업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특히 학생들이 인성 덕목을 주제로 직접 시나리오를 집필하고 영화를 제작하는 활동은 본교의 시그니처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학생들이 제작한 영화 ‘교실에 갇혔다’는 제32회 EBS교육방송연구대회에서 전국 1등급을 수상하며 학생들의 창의적 역량을 입증하였다.



[그림 19] AI 작곡 및 가창 수업



[그림 20] 학생 제작 영화 촬영



[그림 21] 영화 감상 QR코드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중국 항저우의 사립 운곡학교와 3년째 온라인 국제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학생들은 번역 앱과 화상 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교생활 브이로그(V-log)를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탕후루를 함께 만드는 등 시공간을 초월한 소통을 이어간다. 또한, 원어민영어보조교사(EPIK)가 학교에 상주하며 정규 수업과 방과후 수업, 방학 캠프를 주도하여 학생들이 외국어에 대한 거부감 없이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그림 22] 중국 전통 문화 소개



[그림 23] 국제교류 뮤지컬 제작



[그림 24] 원어민 영어 수업

나아가 마을 공동체와의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봄별 마을 도서관’과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다. 주민들이 희망하는 도서를 비치하고 학생 제작 영화 상영회를 개최함으로써 학교가 마을의 문화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아울러 학생 자치회가 주관하는 <주인공 학교신문>과 독서 신문 <북메이트>를 매월 발간하여 마을 곳곳에 학교 소식을 전하며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림 25] 마을 도서관 대여 이벤트



[그림 26] 별빛 영화 상영회



[그림 27] 독서 신문 ‘북메이트’

운영 성과 및 마무리

‘봄별 프로젝트’를 운영한 결과, 학교 교육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배움(S), 공동체(U), 미래 역량(N)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모든 문항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평균 점수가 3점 만점에 2.9점 이상을 기록함으로써 본 프로젝트의 실효성을 입증하였다. 특히 학부모들은 “농어촌 소재 학교임에도 시설이 매우 좋고 선생님들의 개별 학생들에 대한 세심한 지도가 만족스럽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보내고 있다.

학생들의 성취 또한 다방면에서 두드러진다. 교육장기 육상대회 종합 2위, 봉화 스포츠클럽 긴줄넘기 1위 등 체육 분야에서의 활약은 물론, 경북 과학발명품대회 장려상, 약물오남용 예방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등 학술과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학생들의 잠재력이 꽃을 피우고 있다. 춘양초등학교는 이러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농어촌 학교의 불리한 여건을 오히려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운영 방안을 일반화하여 제시할 예정이다.

통폐합의 위기 속에서 춘양초등학교가 비춘 ‘봄별’은 소규모 학교가 나아가야 할 이정표가 되었다. 앞으로도 학교-지자체-마을 공동체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생들이 미래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며, 이 프로젝트의 운영 성과가 전국의 소규모 학교들에게 희망의 길을 비추는 선도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그림 28] 학교폭력예방교육 홍보



[그림 29] 디지털 우수사례 홍보



[그림 30] 재난안전훈련 홍보



[학생 제작 봄별 춘양 교육 홍보 웹툰]

삶을 과학으로 읽다

- 디지털 과학 숲(FOR-REST) 프로젝트로 미래 시민 과학자 양성하기

박진영(대전버드내중학교 과학 교사)



교실 속 과학 수업 변화의 시작

“선생님, 저는 과학자가 꿈이 아닌데 왜 과학을 배워야 해요?”

과학 수업을 하다 보면 종종 듣게 되는 질문이다. 틀린 질문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과학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왜 과학을 배우고, 또 배워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배우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숨 쉬는 공기, 발밑의 땅, 움직이는 물체, 주변의 생명들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온통 과학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그것을 과학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교과서 속 개념은 알고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과 연결된 경험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수업을 하다 보면 종종 반가운 순간을 만나게 된다. 학생이 세임클로버와 네임클로버를 보며 “선생님, 이거 변이 아니에요?”라고 말하거나, 학교 운동장이나 화단에 있는 돌을 보며 “이거 화강암 같은데요?”라고 이야기할 때다. 과학 수업에서 배운 개념과 원리가 학생들의 일상 속에서 다시 떠오르는 순간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과학 교사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 이러한 장면은 교과서 속 지식이 교실을 넘어 학생의 삶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강조하는, 학생들이 삶과 연결하여 과학을 이해하고 세상을 과학적으로 바라보는 학습의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나는 학생들이 과학자가 되지는 않더라도 아는 만큼 보인다는 사실을 삶 속에서 경험하길 바랐다. 자신의 일상에서 과학을 발견하고, 과학을 즐기며 과학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랐다. 과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과학자는 아니지만, 과학적 내용을 흥미롭게 받아들이고 과학 문화를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즉 과학자와 일반 대중 사이에서 과학을 이해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미래 시민 과학자’ 말이다.

사실 이러한 방향은 그동안의 수업에서도 늘 추구해 왔던 목표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더 분명한 시도를 해 보고 싶었다. 학생들이 과학을 삶과 연결해 이해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표현하며, 과학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수업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고자 했다. 그래서 수업의 출발점을 조금 바꾸어 보기로 했다.

‘과학을 배우는 수업이 아니라, 삶을 과학으로 읽어 보는 수업.’

이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 디지털 과학 숲(FOR-REST) 프로젝트이다.

디지털 과학 숲(FOR-REST) 프로젝트: 배움이 모여 숲이 되다!

앞서 이야기한 고민을 바탕으로, 교실 수업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혁신하려는 노력을 시작했다. 그동안 과학 수업에서도 학생들이 과학을 단순히 교과서 속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과 연결해 이해하길 바라는 마음은 늘 있었지만,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수업의 흐름을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학생들의 배움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하나의 수업 모형을 구상해 보기로 했다.

수업을 설계하면서 가장 먼저 살펴본 것은 단원별 성취기준과 2022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의 방향이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삶과 연결하여 이해하고 탐구하는 학습을 강조한다. 또한, 학생 참여 중심 수업과 디지털 기반 학습 환경의 활용 역시 중요한 흐름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을 실제 교실 수업 속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프로젝트 수업의 틀을 구상하였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학생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일까?’

‘삶과 연결된 주제를 어떻게 수업 속에 담을 수 있을까?’

‘어떤 산출물이 만들어지면 배움이 더 의미 있어질까?’

‘디지털 도구는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특히 에듀테크의 활용 방식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도구들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지만, 때로는 도구 자체가 수업의 목적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 수업의 목표에 맞게 디지털 도구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디지털 도구는 학생들이 자신이 이해한 과학을 표현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학습 도구로 활용될 때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디지털 과학 숲(FOR-REST)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단원별 성취기준을 삶과 연결하여 학습의 목적을 새롭게 바라보고, 그 목적을 중심으로 수업의 흐름을 설계한 프로젝트형 수업이다. 프로젝트의 이름에도 이러한 생각을 담았다. 'FOR'은 단원에서 배우는 과학을 왜 배우는가에 대한 목적을 삶과 연결해 다시 바라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예를 들어, 지권 단원에서는 '우리 발밑의 땅을 이해하고 살아가기 위해', 힘 단원에서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이해하고 살아가기 위해'와 같이 단원의 학습 목표를 학생들의 삶과 연결된 관점에서 재구성하였다. 이는 과학을 배우는 이유가 학생들의 삶과 자연스럽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이러한 'FOR'의 목표를 중심에 두고 수업의 흐름을 'REST' 단계로 구성했다. 학생들은 먼저 자신의 삶과 과학을 연결해 보는 활동으로 수업을 시작한다(Related to life). 이후 탐구와 경험을 통해 과학 개념을 이해한다(Explore & Experience). 다음으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자신이 이해한 과학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며 과학을 바라보는 감각을 넓혀 간다(Scientific Sense-up). 마지막으로 서로의 결과물을 공유하고 함께 성찰하며 배움을 확장해 나간다(Reflect Together).

본 프로젝트 이름에 '숲'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이러한 수업의 모습을 떠올리며 붙인 것이다. 수업 속에서 학생들이 만들어 낸 산출물 하나 하나는 작은 나무와 같다. 그리고 이러한 나무들이 모이면 하나의 숲이 된다. 학생들은 자신의 결과물을 디지털 과학 숲 공간에 공유하고 서로의 생각을 살펴봄에 질문을 주고받는다. 한 학생의 아이디어가 또 다른 학생의 생각으로 이어지면서 배움은 점차 넓어지고 깊어진다. 이 숲은 단순히 결과물이 모여 있는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학생 한 명 한 명도 이 숲을 이루는 나무와 같다. 학생들은 탐구하고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성장해 가고, 그 과정에서 만들어 낸 산출물들은 학생들이 과학 수업을 통해 쌓아 온 경험을 담은 하나의 디지털 포트폴리오가 된다.

그래서 디지털 과학 숲은 단순한 결과물 전시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의 생각과 배움이 차곡차곡 쌓여 가는 하나의 배움의 숲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프로젝트 수업이 실제 교실에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몇 가지 수업 사례를 통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암석을 캐릭터로 만나다: 함께 만드는 디지털 암석 도감

지권의 변화 단원을 수업할 때마다 늘 고민이 있었다. 암석 단원은 학생들에게 유독 '외워야 할 것이 많은 단원'으로 느껴지기 쉽기 때문이다. 화강암, 현무암, 역암의 특징을 정리하고 문제도 풀어 보는 방식의 학습은 일시적으로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학생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암석을 조금 더 흥미롭게, 그리고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배울 수 없을지 고민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먼저 학생들이 암석을 직접 살펴볼 기회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림1]과 같이 학교 주변에서 돌을 찾아 기록하는 '암석 보물 찾기' 활동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운동장과 화단 주변을 살피며 돌을 찾아 사진을 찍고, 돌의 특징을 기록했다.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치던 돌이었지만,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암석과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그림2]처럼 디지털 USB 현미경을 이용해 암석을 관찰했다. 확대된 화면 속에서 알갱이의 크기와 색, 광물의 분포가 또렷하게 보이자 학생들은 서로 비교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현무암보다 화강암에 밝은 색 광물이 더 많다"와 같은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공유되었다. 이후 [그림3]과 같이 퀴즈 게임을 활용해 암석의 특징을 반복적으로 복습하는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암기 중심 학습을 보다 흥미롭게 보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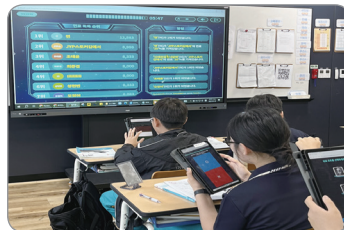
이처럼 암석의 특징을 충분히 관찰하고 이해한 뒤에는 학생들이 암석을 캐릭터라는 형태로 표현하면 암석을 조금 더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기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생성형 AI를 활용해 암석 캐릭터를 만들고 이를 활용한 디지털 암석 도감을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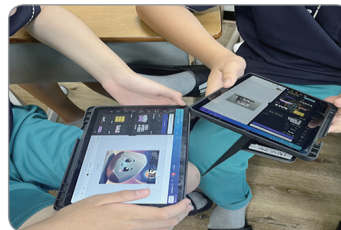
[그림 1] 학교 암석 보물 찾기



[그림 2] 디지털 USB 현미경으로 암석 관찰



[그림 3] 퀴즈 게임 활용 수업



[그림 4] 인공지능으로 암석 캐릭터 생성 및 도감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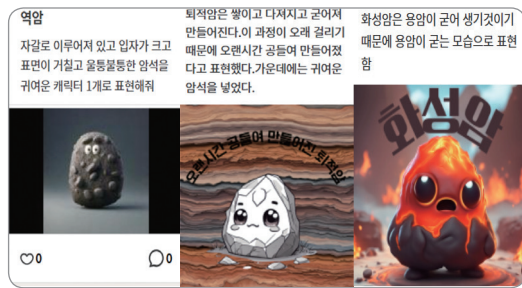
먼저 학생들은 학습한 암석의 특징과 추가로 조사한 내용을 정리한 뒤 [그림5]와 같이 이미지 생성 AI에 입력할 프롬프트(prompt)를 직접 작성했다. 예를 들어, 화강암이라면 밝은 색 알갱이와 단단한 질감, 석영과 장석이 섞인 모습이 드러나도록 표현하고, 현무암은 어두운 색과 화산에서 만들어진 특징이 나타나도록 설명하도록 했다.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 이미지가 달라졌기 때문에 학생들은 표현을 여러 번 고쳐 가며 캐릭터를 조금씩 발전시켜 나갔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암석의 특징을 다시 한번 검토하게 되었고, 어떤 특징을 포함해야 하는지 서로 이야기하며 프롬프트를 다듬었다. 만약 직접 그림을 그리는 활동이었다면 상당한 시간이 그림 작업에 쓰였겠지만, 이 활동에서는 암석의 특징을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쓰였다.

학생들이 작성한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다양한 암석 캐릭터가 만들어졌다. 같은 암석을 주제로 했지만 결과는 모두 달랐다. 어떤 학생은 화강암을 ‘쿠키 앤 크림’ 아이스크림처럼 표현했고, 어떤 학생은 암석이 사용되는 용도를 떠올리며 캐릭터를 만들기도 했다. 학생들은 자신이 만든 캐릭터와 함께 암석의 특징, 형성 과정, 활용 사례 등을 정리해 디지털 암석 도감을 완성했다. 완성된 도감은 [그림6]과 같이 디지털 과학 숲 공간에 전시하였으며, 학생들은 서로의 작품을 살펴보고 동료 평가를 하며 캐릭터의 특징과 암석의 성질을 함께 이야기했다.

수업이 진행되면서 흥미로운 변화가 하나 나타났다. 학생들이 학교를 오가다 보이는 돌을 그냥 지나치지 않기 시작한 것이다. “선생님, 이거 화강암 같은데요?”라며 돌을 가져오는 학생도 있었고, “이건 역암 같아요. 자갈이 섞여 있잖아요.”라며 설명하는 학생도 있었다. 무심코 지나치고 관심도 없던 돌을 과학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미래 시민 과학자로 성장한 것이다. 디지털 암석 도감 프로젝트는 각자가 하나의 암석을 선택해 조사하고 도감으로 정리하는 활동이었다. 학생들은 자신이 맡은 암석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되었고, 다른 친구들이 만든 도감을 보며 또 다른 암석의 특징도 함께 학습하였다.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프롬프트를 수정하고 특징을 다시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암석의 성질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스스로

고민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 도구를 사용하는 방식도 함께 익힐 수 있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도감들은 디지털 과학 숲에 모였고, 학생들은 서로의 작품을 보며 질문하고 댓글을 남기며 이야기를 이어 갔다.

우리는 늘 땅 위를 걸어 다니지만, 정작 발밑의 세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보지 않는다. 돌 하나를 보고도 과학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것, 여행지의 바위나 산을 보며 “이 암석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고 질문할 수 있는 시선. 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이러한 과학적 시각을 한 번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랐다.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땅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일상 속에서 과학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 수업은 학생들이 그런 경험을 한 번쯤 해 보는 시간이었기를 바란다.



[그림 5] 암석 캐릭터 생성 프롬프트 작성



[그림 6] 디지털 과학 숲 암석 도감 전시장

또 다른 디지털 과학 숲 프로젝트 수업 이야기

디지털 과학 숲 프로젝트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학생들이 과학 개념을 단순히 이해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자신의 방식으로 표현하며 내면화하는 과정이었다. 과학을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갖춘 '미래 시민 과학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암석 도감 프로젝트 외에도 여러 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 활동을 시도했다. 예를 들어, 지구계 단원에서는 지구계의 구성요소 간 관계를 이야기로 풀어내는 '지구계 소개 그림책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여러 가지 힘 단원에서는 일상에서 발견한 마찰 현상을 촬영해 설명하는 '마찰력 쇼츠(shorts)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축구화, 자전거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장면, 책상 위에서 물건이 쉽게 미끄러지지 않는 이유와 같은 상황을 직접 촬영해 짧은 영상으로 정리했다. 자신이 촬영한 장면을 과학 개념과 연결해 설명하며 영상 속에 마찰력의 원리를 담아내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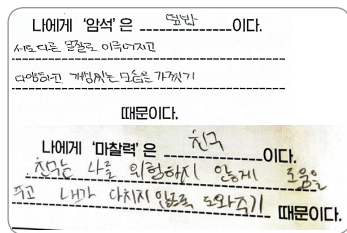
이처럼 단원마다 활동의 형태는 조금씩 달랐지만, 활동의 목적은 단순히 결과물을 만드는 데 있지 않았다. 학생들이 과학 개념을 정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경험을 해 보도록 하는 것이었다.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표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과학 개념을 다시 돌아보며 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학생들이 과학을 바라보는 태도에도 조금씩 변화를 만들어 내기 시작했다.

학생들의 변화와 교사로서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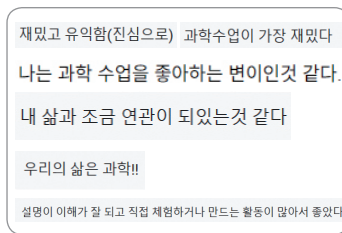
디지털 과학 숲(FOR-REST)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과학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다른 개념을 실제 경험과 연결해 이야기하기도 했고, 주변에서 관찰한 사례를 떠올리며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과학 개념을 단순히 정답으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라는 질문으로 사고를 확장하는 모습이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또한, 친구들이 만든 결과물을 보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다른 모둠의 산출물을 보며 새로운 생각을 발견하기도 하고, 같은 개념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결과를 비교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생들이 만든 다양한 결과물이 하나의 공간에 모이면서 배움의 범위로 자연스럽게 넓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변화뿐 아니라 나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처음에는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하면서 여러 고민이 있었다. 정해진 진도를 나가면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을지, 학생들이 실제로 흥미를 느낄지, 준비 과정이 너무 부담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서 수업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달라졌다. 학생들이 스스로 관찰하고 표현하는 활동 속에서 배움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과학 수업의 방향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년 동안 노력한 프로젝트 수업의 경험을 정리하여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에 출품하였고, 다행히 여러 훌륭한 선생님들과 함께 전국 1등급에 입상하는 성과를 얻었다. 이를 계기로 사례 발표와 해외 연수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온 수업 이야기가 다른 교사들과 공유되고 의미 있게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교사로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나의 수업을 돌아보고 정리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연구하는 교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그림7] 학생들이 작성한 나에게 ○○이란?



[그림8] 학년말 설문조사 결과



[그림9] 전국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 1등급 수상 및 사례 발표 장면

미래 시민 과학자가 된 학생들의 미래를 꿈꾸며

디지털 과학 숲(FOR-REST)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마음속에 두었던 생각이 있다. 학생들이 과학을 시험을 위한 과목으로만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다. 과학은 교과서 속에만 있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을 바라보고 궁금해하며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경험 자체가 과학이라고 생각한다.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이러한 경험을 조금이라도 해 보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학생들이 학교를 떠난 이후에도 일상에서 과학을 떠올리는 순간이 한 번쯤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길을 걷다가 자연 현상을 보며 그 이유를 생각해 보거나, 주변의 변화를 보며 호기심을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과학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교실에서 시작된 작은 경험이 학생들의 삶 속에서도 이어지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과학을 즐기며 살아가기를 조용히 응원해 본다. 🏠





026

교육통계 Focus

교육정보화에서 AI·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으로

이수환(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교육정보화에서 AI·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으로

이 수 환(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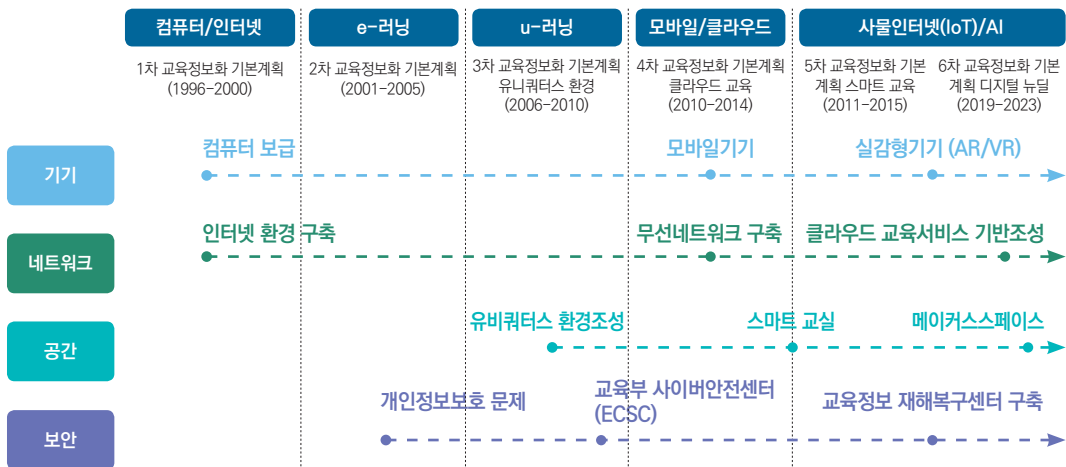
교육 현장에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그리고 학생들에게 어떤 역량을 길러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OECD, 2018; UNESCO, 2024). 기술의 발전 속도가 교육적 실행과 성찰을 앞지르는 시대에 이 문제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나 도구를 교실 안으로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AI와 공존할 미래 세대를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국가 차원에서도 본격화되고 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통해 교육 분야의 AI 기반 혁신 방향을 제시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2026).

그러나 이러한 고민은 최근에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다. 이른바 '5.31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1996년 발표된 제1차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은 컴퓨터와 인터넷이 확산되던 시기에 세계화·정보화의 요구에 교육이 응답하고자 했던 전환의 출발점이었다(안병영&하연섭, 2015).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 AI·디지털 전환에 대한 고민은 과거 교육정보화를 추진했던 노력의 연장선 위에 있다. 따라서 과거 교육정보화 정책과 주요 AI·디지털 관련 지표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일은 향후 AI·디지털 시대 교육혁신의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번 「교육통계 Focus」에서는 교육정보화의 변천과 AI·디지털 관련 통계를 바탕으로, AI·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으로의 전환 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교육정보화 기본계획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은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교육 혁신 전략으로 추진되어 왔다. 1996년 제1차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교육정보화 정책은 학교 컴퓨터 보급, 인터넷 환경 구축, 교육정보서비스 확대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발전하였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교육정보화의 초기 성격은 교수·학습의 전면적인 체질 개선보다는 학교 현장에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고 활용 기반을 조성하는 '물적 토대 구축'에 가까웠다. 이는 당시의 기술적·환경적 여건을 고려할 때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디지털 기기와 네트워크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의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 현장의 접근성과 기반 여건을 확보하는 일이 선행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림 1] 정보화 기기 변화과정 (KERIS,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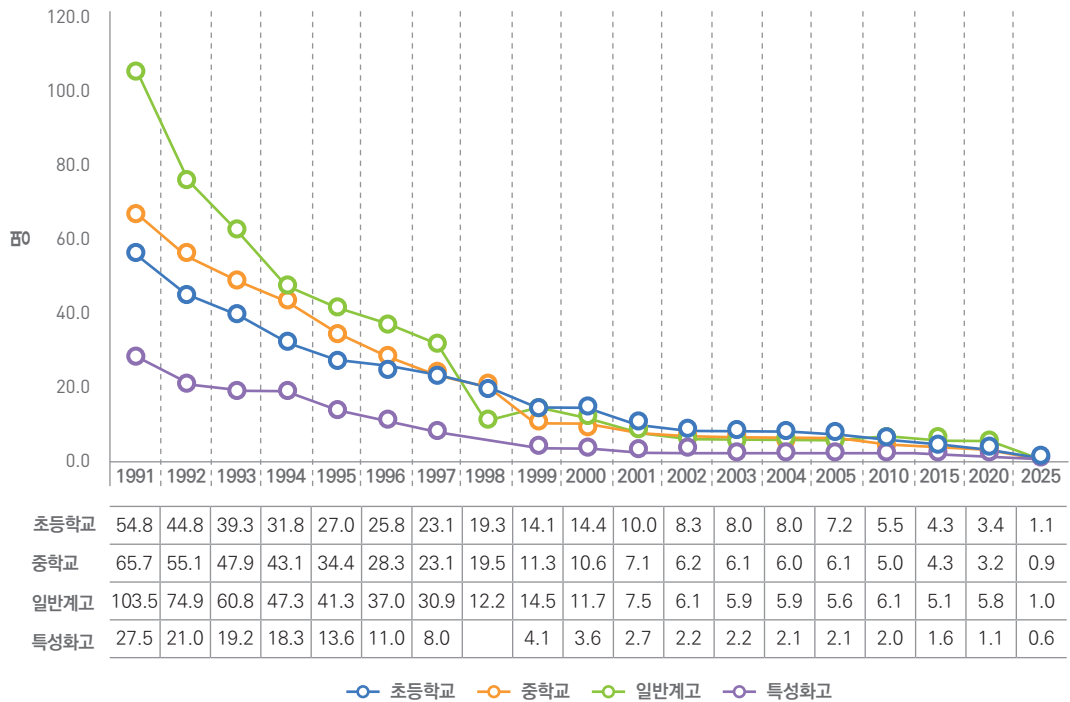
따라서 초기 정책은 학교에 컴퓨터 보급 대수를 늘리고 인터넷을 연결하는 한편, '에듀넷'과 같은 교육정보 서비스를 구축하여 학생과 교사가 디지털 환경에 접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였다. 이와 함께 교원 정보화 연수와 교육용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보급을 병행함으로써, 단순한 기기 확충을 넘어 디지털 활용의 기초 역량을 형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정리하면, 학교 교육이 정보화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물적·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는 제7차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에 이르렀다. 제1차 계획 이후 컴퓨터 보급, 인터넷 환경 구축, 교육정보서비스 확대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면, 제7차 계획은 이러한 기반 위에서 교수학습 혁신, 맞춤형 교육, 디지털 기반 행정 고도화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즉, 과거 교육정보화가 학교를 디지털 환경에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그 토대 위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육의 내용과 방식, 지원 체계 전반을 정교하게 혁신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컴퓨터 1대당 학생 수 장기 추이

교육정보화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 가운데 하나는 컴퓨터 1대당 학생 수이다. 1991년 기준으로 초등학교는 54.8명, 중학교 65.7명, 일반계고등학교 103.5명, 특성화고등학교 27.5명이었으나, 2025년에는 각각 1.1명, 0.9명, 1.0명, 0.6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내 디지털 기기 접근 여건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해당 지표는 시기별로 포함되는 기기 범주가 다르므로, 장기 추이를 해석할 때는 단순 비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단위: 명



[그림 2] 컴퓨터 1대당 학생 수 통계(1991년~2025년)

자료: 1991년~2005년의 통계는 한국교육개발원(2005)에서 재인용; 2010년, 2015년의 통계는 한국교육개발원(2016)에서 재인용; 2020년, 2025년은 교육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산출식을 통해 산출

주1: 산출식: 전체 학생 수 ÷ (학생용 + 교원용 컴퓨터 수), 단 1991~1995년에는 교원용 컴퓨터가 불포함 된 것임.

주2: 1998년의 일반계고 수치는 실업계고와 합산한 것이며, 따라서 특성화고 값은 표기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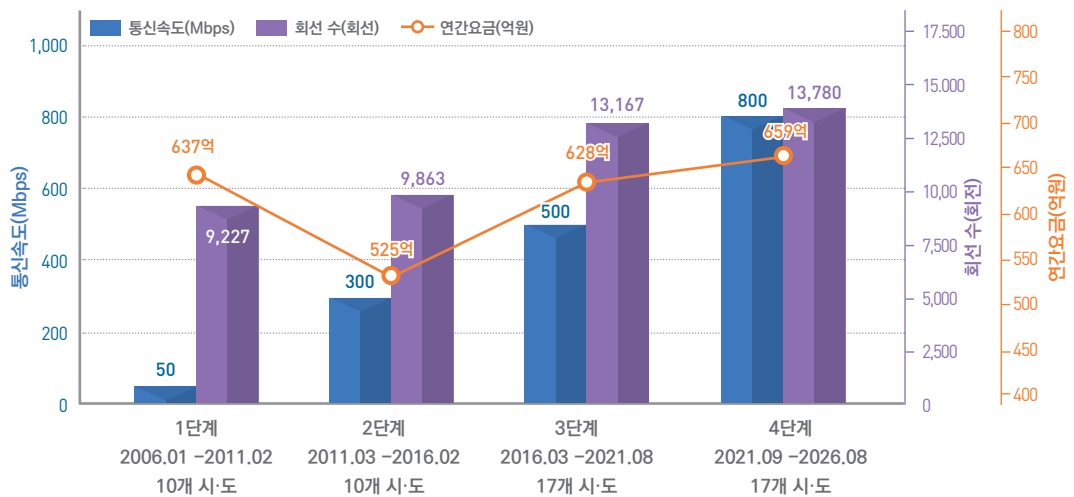
주3: 1991년~2005년은 실업계고임.

주4: 컴퓨터에 대해 1999년~2012년은 데스크탑의 CPU칩셋 종류(486 등); 2013년~2017년은 데스크탑, 노트북 스마트패드; 2018년~2021년은 데스크탑, 노트북, 태블릿; 2022년 이후 데스크탑, 노트북, 태블릿, 기타를 포함함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환경

학교의 디지털 인프라는 컴퓨터 보급뿐 아니라 네트워크 환경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왔다. 교내 유·무선망 구축은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과 교육행정 운영의 기본 조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먼저 유선망 측면에서 스쿨넷 서비스 사업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2006년부터 교육기관에서 민간 통신망을 활용하여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담·관리하는 인터넷망 공동구매 사업이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4: 113). 1999년 초고속국가망 사업을 통해 전국 초·중등학교 인터넷망 구축을 완료한 후 2021년부터 4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학교의 유선 통신 속도는 800Mbps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2.5~10Gbps급 속도의 유선망을 구축하기 위한 시범 사업도 추진 중이어서, 학교 인터넷 연결성의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4: 22).



[그림 3] 스쿨넷서비스 단계별 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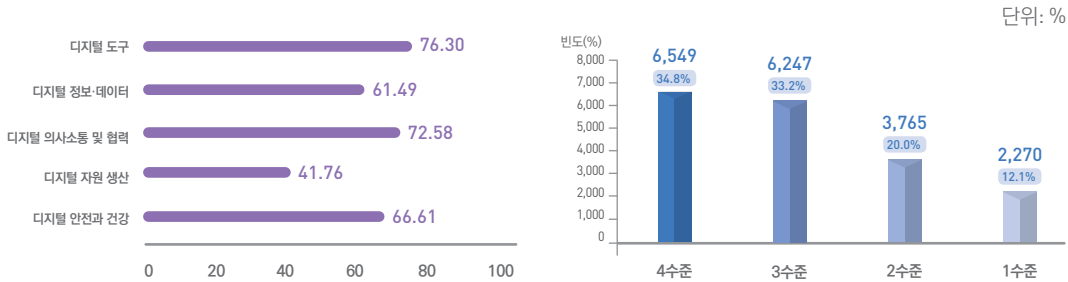
자료: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24: 113)

주: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24: 113)의 [표 1-1-29]를 시각화 한 것임.

교내 무선망의 경우 2020년도부터 Wi-Fi 6(802.11ax, 2.4GHz/5GHz) 이상의 장비를 기반으로 무선망 구축을 진행하였으며, 2023년도부터는 Wi-Fi 6E(802.11ax, 2.4GHz/5GHz/6GHz) 이상 장비로 구축하고 있다.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국 17,653개 학교에 AP(access point) 213,049개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 무선망 또한 고도화가 진행 중이다(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24).

초·중학생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디지털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실시한 2024년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 측정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디지털 리터러시 검사 총점 평균은 64.02점(100점 환산)이었다. 영역별로는 ‘디지털 도구’ 영역이 76.3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디지털 자원 생산’ 영역이 41.76점으로 가장 낮았다. 성취 수준별로는 4수준이 34.8%로 가장 많았고, 3수준이 33.2%로 전체의 68%의 학생이 중상위 수준에 해당하였다.



[그림 4] 평가영역별 100점 환산점수(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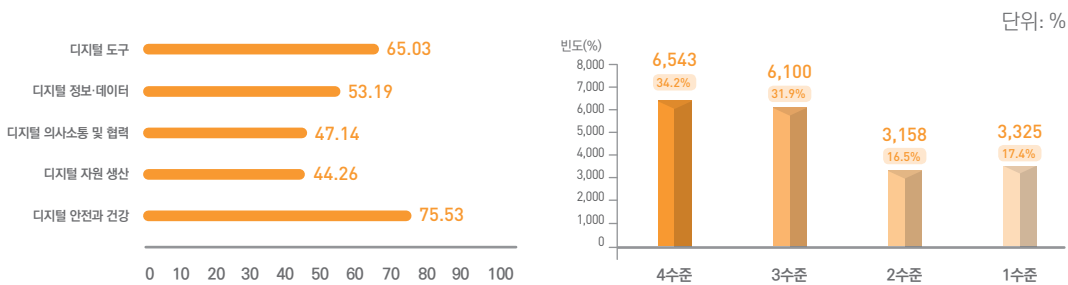
[그림 5] 디지털 리터러시 성취수준(초)

자료: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25: 38)

주1: 전국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 수의 약 1%에 대해 유층무선표집함.

주2: 4수준-3수준-2수준-1수준 순으로 역량이 높음.

중학생의 경우 총점 평균은 57.57점(100점 환산)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는 ‘디지털 안전과 건강’ 영역이 75.5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디지털 자원 생산’ 영역이 44.26점으로 가장 낮았다. 성취 수준별로는 4수준 34.2%, 3수준 31.9%로 중상위권 학생이 66.1%였다. 다만 주목할 점은 1수준 학생(17.4%)이 2수준 학생(16.5%)보다 0.9%p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며, 이는 하위 역량 학생에 대한 다각적인 원인 분석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림 6] 평가영역별 100점 환산점수(중)

[그림 7] 디지털 리터러시 성취수준(중)

자료: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25: 37)

주1: 전국 중학교 1, 2, 3학년 학생 수의 약 1%에 대해 유층무선표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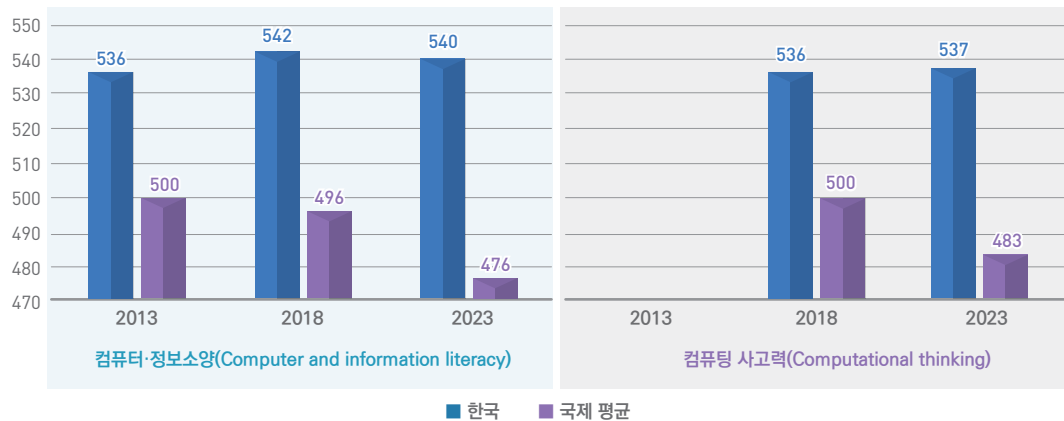
주2: 4수준-3수준-2수준-1수준 순으로 역량이 높음.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디지털 자원 생산’ 영역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점은 공통적인 특징이다. 이는 학생들이 디지털 창작물을 단순히 소비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생산하고 표현하는 역량의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컴퓨터·정보 소양 및 컴퓨팅 사고력

국제 비교 측면에서는 국제 컴퓨터·정보 소양 연구(International Computer and Information Literacy Study; 이하 ICILS)가 있다. ICILS는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컴퓨터·정보 소양 및 컴퓨팅 사고력을 측정하며 척도점수와 성취수준별 학생 비율로 탐색할 수 있다. 국제 교육성취도 평가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IEA)가 주관하고 있으며, 컴퓨팅 사고력의 경우 2018년부터 측정하기 시작하였다.

단위: 점



[그림 8] 컴퓨터·정보 소양 및 컴퓨팅 사고력 평가 척도점수(한국, ICILS 평균)(2013, 2018, 2023)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25: 181)에서 재인용

주1: 조사 대상 = 중학교 2학년 학생 및 교사

주2: ICILS 평균이란 표집 참여율 기준을 충족한 모든 비벤처마킹 참가국을 대상으로 산출한 ICILS 2023 평균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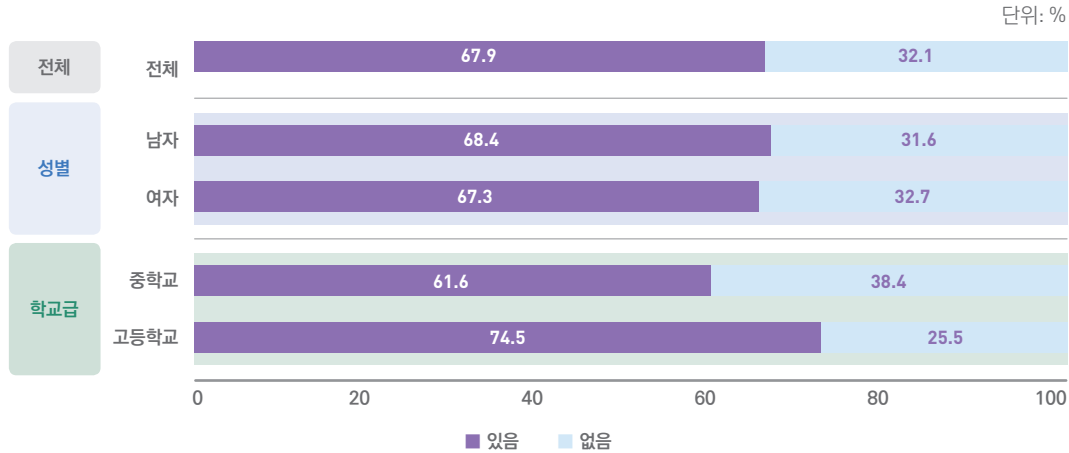
주3: ICILS 척도점수 = 평균 500, 표준편차 100

주4: ICILS 2013 주기에는 컴퓨팅 사고력을 측정하지 않음

ICILS 2023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생의 컴퓨터·정보 소양 평균 점수는 540점으로, ICILS 2018(542점) 대비 소폭 낮아졌으나 대체로 유사한 수준이며, ICILS 평균(476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컴퓨팅 사고력 평균 점수는 537점으로, ICILS 2018(536점) 대비 소폭 향상되었으나 대체로 유사하며 ICILS 평균(48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우리나라 학생들의 컴퓨터·정보 소양 및 컴퓨팅 사고력은 현재 국제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청소년의 생성형 AI 사용 경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4년 전국의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67.9%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74.5%)이 중학생(61.6%)보다 12.9%p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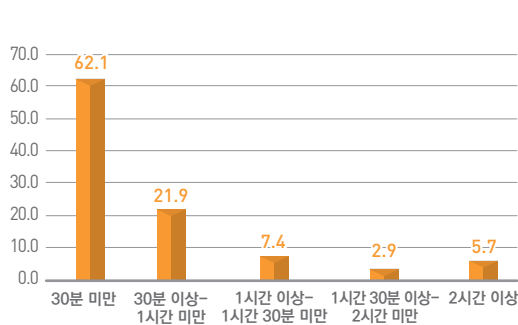
[그림 9] 생성형 AI 사용여부

자료: 이창호 외(2024: 105)의 <표VI-7>을 시각화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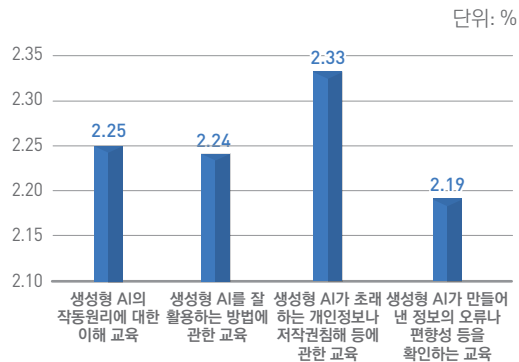
주1: 전국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층화다단계집락표집함

주2: 총원 = 5,778명 (남: 2,985명; 여:2,793명)

이용 시간 측면에서는 하루평균 30분 미만인 62.1%로 가장 많았으며, 2시간 이상은 5.7%에 그쳤다.



[그림 10] 생성형 AI 하루평균 이용시간(%)



[그림 11] 생성형 AI 관련 교육 경험

자료: 이창호 외(2024: 110)


주1: 전국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층화다단계집락표집함

주2: 총원 = 5,778명 (남: 2,985명; 여:2,793명)

주3: [그림 11]은 4점 척도이며 '1=전혀 받아본 적 없다 - 4=자주 받았다' 임

생성형 AI와 관련된 교육 경험에 대해서는 4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생성형 AI가 초래하는 개인정보나 저작권침해 등에 관한 교육(2.33)', '생성형 AI의 작동원리에 대한 이해교육(2.25)', '생성형 AI를 잘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2.24)', '생성형 AI가 만들어 낸 정보의 오류나 편향성 등을 확인하는 교육(2.19)'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네 항목 모두 평균값인 2.5에 미치지 못했다. 이는 청소년들의 생성형 AI 사용 경험(67.9%)에 비해 관련 교육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AI·디지털 시대의 교육혁신

교육의 디지털 전환은 이제 인프라 확충의 단계를 넘어, 학습자와교원, 그리고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활용 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지원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학생에게는 디지털 기술과 생성형 AI를 활용해 결과물을 산출하는 생성 역량과, 그 과정에서 정보의 정확성과 적절성을 판단하는 비판적 검증 역량이 요구된다. 교사에게는 생성형 AI를 수업과 평가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며, 학교 차원에서는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AI 활용 환경과 행정 적용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향후에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학생의 생성 역량과 비판적 검증 역량, 교사의 AI 활용 및 수업 설계 역량, 학교 차원의 AI 활용 환경과 행정 적용 수준을 함께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체계가 필요하다. 이는 교육의 AI·디지털 전환 수준을 다차원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정책 추진의 우선순위와 지원 방향을 구체화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반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2026).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교육부(2024). 디지털 교육 대전환을 위한 제7차 (2024~2028) 교육정보화 기본계획. 교육부.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5). 2025 한국의 교육지표. 한국교육개발원.
 안병영·하연섭(2015). 5·31 교육개혁 그리고 20년. 다산출판사.
 이창호·모상현·배상률·이세영(2024). 청소년의 생성형 AI 이용실태 및 리터러시 증진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2005). 교육개발 9+10월호. 교육개발, 31(5).
 한국교육개발원(2025). 2025년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21). K-Edu 교육정보화 모델: 정책가이드라인과 역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24). 2023년 디지털교육백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2025). 2024년 디지털교육백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4). 데이터로 살펴본 디지털 교육혁신 현황-AI 디지털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OECD(2018).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Education 2030. OECD Publishing.
 UNESCO(2024). AI competency framework for students. UNESCO.

인터넷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16.6.23). [2016년 6월] 학교급별 교육정보화 인프라 현황. <https://kess.kedi.re.kr/post/6655298> (2026.3.13. 인출).





KEDI 교육연구

연구로 읽는 교육정책의 미래
KEDI 주요 연구 성과 소개

연구로 읽는 교육정책의 미래

KEDI 주요 연구 성과 소개



한국교육개발원은 우리 교육이 직면한 정책적 과제를 진단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연구를 지속해서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교육정책의 기획과 실행을 뒷받침하는 주요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호에서는 ▲ 교육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성과 제고 방안 ▲ 대도시 학교규모의 국지적 양극화 실태와 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 ▲ 학생 웰빙과 학업성취의 관련성 분석 및 정책적 지원 방안 ▲ 맞춤형 학생 피드백 제공을 위한 학습분석 활용 방안 등 총 10편의 연구를 담았다. 이들

연구는 우리 교육이 마주한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해 다면적 분석과 실천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보고서 전문과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교육혁신 사례, 정책 동향 분석 등을 시의성 있게 정리한 「KEDI Brief」는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www.kedi.re.kr) 내 '연구사업 → 연구자료 → 연구보고서/KEDI Brief' 메뉴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교육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성과 제고 방안

저자 안해정, 김나영, 김지수, 김지혜, 유예림(이상 한국교육개발원), 최예슬(전북대학교), 김용우(서울양원숲초등학교)

» 연구 목적

-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성과 모니터링
- 학생맞춤통합지원 운영 모델 도출
- 학생맞춤통합지원 성과 제고 방안 탐색

» 주요 연구 내용 및 결과

교육복지 패러다임 변화 동향 분석

- 교육복지의 개념과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교육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동향을 탐색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등장 배경을 살펴봄.
-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기존의 교육복지에 대한 개념적 논의의 틀을 넘어서 학생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실리적 접근을 강조하며, 새로운 교육복지의 패러다임을 반영함.

학생맞춤통합지원 실태 분석

- 2024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실태를 투입(학생지원사업 예산), 운영과정(체계 구축 및 운영)과 운영 결과(학생 성장)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함.

학생맞춤통합지원 운영 모델 도출

-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의 실제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학교 단위에서의 운영 모델(① 부장회의 중심형, ② 학년부 중심형, ③ 핵심팀 중심형)과 적용 가이드를 제시함.

학생맞춤통합지원 성과 제고 방안 제시

-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부 등 각 단위에서 추진 가능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성과 제고 방안을 ① 제도 및 여건 개선, ② 추진 체계 구축, ③ 운영 개선 및 지원, ④ 구성원 역량 강화 및 문화 조성의 영역별로 제안함.

대도시 학교규모의 국지적 양극화 실태와 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

저자 이강주, 서무계, 권순형(이상 한국교육개발원), 이호준(청주교육대학교)

» 연구 목적

-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대도시 내부의 지역 간 경제·사회적 격차로 인해, 동일 생활권(반경 500m 이내) 내에서 과밀학교와 소규모학교가 공존하는 '국지적 양극화' 현상을 분석함.
- 이러한 양극화가 단순한 학생 수 감소가 아니라 주거지 선택, 학부모의 쏠림 현상, 도시 계획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함을 밝히고, 놓여온 소규모 학교 중심이었던 기존 '적정규모 학교육성 정책'의 한계를 넘어서는 대도시 맞춤형 정책 대안을 모색함.

» 주요 연구 내용 및 결과

국지적 양극화 실태 및 원인 분석

- 7대 특별·광역시 분석 결과, 대부분의 대도시에서 학교 규모의 국지적 양극화가 확인되었으며, 서울 지역 초등학교에서 격차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남.
- 학부모의 학교 선택은 합리적 정보보다는 평판, 사회적 압력, 손실 회피 성향 등에 의한 '쏠림 현상(Herding)'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이것이 특정 학교 과밀화와 인근 학교 공동화를 심화시킴.
- 신도시 및 재개발 지역은 과밀학급 문제가, 구도심은 소규모 학교 존치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며 이는 부동산 가격 및 주거지 분리와 밀접하게 연동됨.

» 정책적 대응 방안(제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교육 관련 법령을 연계하여,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교육청의 학생 배치 계획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함.
- 기초자치단체 의회에 학교 및 학생 배치에 대한 협의 권한을 부여하여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함.
-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한 학군 재조정, 신도시 개발 시 선제적 학교 배치, 구도심 재생과 연계한 학군 관리 등 도시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함.
- 국지적 양극화는 교육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도시 정책, 사회 정책, 교육 정책을 통합한 다층적 접근을 통해 완화 및 관리 전략으로 전환함.

학생 웰빙과 학업성취의 관련성 분석 및 정책적 지원 방안

저자 이희현, 송효준, 김슬기(이상 한국교육개발원), 정윤희(가톨릭관동대학교)

» 연구 목적

- 학생 웰빙과 학업성취의 관련성을 다면적으로 살펴보고 학교교육 맥락에서 학생 웰빙과 학업성취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 연구 내용 및 결과

학생 웰빙과 학업성취의 종단적 변화 양상 탐색

- 학생 웰빙과 학업성취의 종단적 관련성(잠재성장모형, LCM-SR모형), 유데모닉 웰빙과 학업성취의 정적 관련성(성장혼합모형)을 토대로 둘 간의 상호보완적 발달 가능성을 확인함.
- 초기 학생 웰빙의 안정적 확보가 종단적 관점에서 학업성취를 위한 핵심요인이며, 특히 유데모닉 웰빙이 학업성취의 지속적인 향상을 예측하는 핵심 변수임을 밝힘.

학생 웰빙과 학업성취 관계에 따른 학생 유형 및 예측 요인 탐색

- 중고등학생의 잠재프로파일 유형은 평균 웰빙-평균 성취형(53.3%), 낮은 주관적 웰빙-최저 성취형(17.9%), 낮은 유데모닉 웰빙-저 성취형(10.5%), 높은 웰빙-고 성취형(18.2%)로 분류됨.
- 학생 웰빙과 학업성취가 모두 높은 집단을 설명하는 예측요인은 교사의 지지와 학교소속감이며, 제도화된 경쟁과 성취압박(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학생 웰빙과 학업성취를 동시에 달성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함.

학업성취 수준별 학생 웰빙 경험의 특징 및 차이 탐색

- 중고등학생은 시험성적 위주의 학교풍토에서 학업성취 수준별로 다른 양상의 웰빙을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함.
- 학업성취 수준별 학생 웰빙 경험의 차이를 가져오는 맥락변인은 학업중심 학교 풍토, 인정과 존중 경험, 교사와 부모의 지지이며, 이들의 상호작용으로 출현되는 삶에 대한 정서적 평가(주관적 웰빙)와 인지적 평가(유데모닉 웰빙), 그리고 성공경험과 노력, 목표에의 추구임을 밝힘.

학생 웰빙과 학업성취를 동시에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안 제안

- 정책 방향으로 “좋은 삶(living well)을 살아가는 개인을 길러내는 교육으로의 전환”을 삼고, 구체적인 전략으로 ①학교교육 목표로서의 학생 웰빙 촉진 지원, ②다양한 성장 경로 보장을 위한 진로교육 고도화, ③개인화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및 평가혁신을 제시함.
- 정책 방향과 전략을 토대로 학생 웰빙과 학업성취를 동시에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과제와 세부 방안을 제안함.

맞춤형 학생 피드백 제공을 위한 학습분석 활용 방안

저자 이주연, 김량, 모영민(이상 한국교육개발원)

» 연구 목적

- 종합적 성취평가 맥락에서 맞춤형 피드백의 효과적 제공을 위해 학습분석의 이론적 틀을 확장하고, 이에 기반한 데이터 기반 실증분석을 수행함.
- 학생의 인지적 역량을 측정하는 기술기반 성취평가를 활용하여 문제 해결 전략에 대한 다양한 수준의 정보를 정량적으로 추출하고 이를 통해 교사를 중심으로 한 AI 기반 맞춤형 피드백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주요 연구 내용 및 결과

학생 성취평가 기반 학습분석 이론적 확장 방향 탐색

- 종합적 성취평가 맥락에서 교사 중심 맞춤형 피드백 구현을 위한 학습분석 확장 프레임워크를 제안함. 이론적 확장은 데이터 수준과 분석 수준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며, 데이터 기반 맞춤형 피드백은 학생의 과정 수준과 자기조절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함.

다층적 분석 프레임워크 도출 및 집단별 및 개인별 피드백 도출을 위한 실증분석

- 집단별 피드백 제공을 위한 1단계 집단 분류 방법론을 교육측정모형(혼합라쉬모형, Rasch-tree)에 바탕을 두고 PISA 2015 과학 평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 분석함.
- 개인별 피드백 제공을 위한 2단계 설명 요인 탐색 방법론을 바탕으로 1단계 결과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실증 분석을 실시함.

맞춤형 피드백 제공을 위한 교사용 대시보드 예시 및 AI 맞춤형 피드백 시스템 구축 방안 도출

-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용 대시보드 개발을 위한 다양한 시각화 예시를 제안함
-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교사용 대시보드 설계안과 함께 교육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AI 맞춤형 피드백 시스템을 제안함.

제안점

- 제안한 AI 맞춤형 피드백 시스템의 실제 개발을 위한 후속 연구 로드맵을 ①연구의 심화 및 확장, ②AI 맞춤형 시스템 개발 및 실증, ③교육 현장 적용 및 지원의 세 가지 차원으로 제안함.

교사의 디지털 교수역량 개발 증진 요인과 지원 과제

저자 김랑, 김혜진(이상 한국교육개발원)

» 연구 목적

- 코로나19 이후 학교 교육의 디지털 전환 속에서, 교사의 디지털 역량 향상이 연수 중심의 지식 습득만으로 지속·확산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디지털 교수역량을 단회적 연수 성과가 아니라 실행-성찰-재구성의 순환을 통해 장기적으로 내면화되는 실천 과정으로 보고, 교사의 내적 기제와 관심 단계별 특성을 기반으로 한 지원 구조를 탐색하고자 하였음.

» 주요 연구 내용 및 결과

디지털 교수역량 개발 과정에 대한 경험적 구조화

- 최근 15년간의 현장 사례 연구 23편을 질적 메타분석하여 디지털 교수역량이 초기 경험의 축적 → 긍정적 실행 경험 강화 → 전문성 심화 및 확산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도출함
- 디지털 도구 도입 후 경험되는 정체성 변화, 교수 신념 재구성, 학습자 특성 반영이 역량 내면화에 핵심적임을 확인함.

교사의 관심 단계별 특징 및 증진 요인 파악

- 선도교사 및 일반교사 122명을 대상으로 CBAM 기반 관심 단계 진단 및 증진 요인 분석을 수행함.
- 초기 단계(0~3단계): 두려움 해소와 실행 경험 축적 → 안정적 인프라, 직관적 도구 경험, 오류 대응이 필요함.
- 후기 단계(5~6단계): 전문성 심화와 조직적 확산 → 심화 연수, 협력 네트워크, 수업 혁신 공유 구조가 필요함.
- 즉, 관심 단계에 따라 요구되는 정책적 지원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달라짐을 실증적으로 확인함.

정책 지원 구조 및 로드맵 제안

- 디지털 교수역량 개발의 방향성을 ①과정 기반, ②교수-학습 기반, ③긍정 경험 기반, ④맞춤형 지원 기반으로 제시함.
- 이를 바탕으로 기반 조성 → 진단 → 습득·체득 → 심화·확산의 4단계 정책 로드맵을 도출하고, CBAM 기반 진단 고도화, 맞춤형 연수, 선도교사 네트워크, 현장 중심 지원체제를 핵심 과제로 제안함.

이공계 분야에서 창의적 성취를 보이는 영재학교 졸업생의 특성과 경험 분석

저자 송효준, 이주연, 박효원(이상 한국교육개발원)

» 연구 목적

- 국가의 과학기술 분야 인재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영재교육진흥법」에 근거하여 추진 중인 ‘영재학교’ 정책은 여러 우수한 성과를 보고하고 있음. 이 연구는 ‘이공계 분야로 진출한 영재학교 졸업생의 특성과 경험에 대하여」 「한국영재교육총단연구 2017」의 양적 질적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미래 영재교육 및 이공계 분야 교육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주요 연구 내용 및 결과

영재학교에서 어떤 특성과 경험이 있는 영재학교 졸업생이 이공계로 진학하며 이들은 어떤 대학 생활을 경험하는가?

- 영재학교 재학 당시의 특성이나 경험이 이후 대학으로의 진학과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영재학교 재학 단계에서의 특성과 경험에서 ‘고(高)적응형’ 집단에 속하는 졸업생의 경우 대학 입학 시의 이공계 진로 선택이 두드러지며, 입학 초기의 학교 적응이나 그 이후 전문성 개발 노력 등의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뛰어난 결과를 나타냄.

이공계 분야에서 창의적 성취를 보이는 영재학교 졸업생은 다른 집단과 비교할 때 어떤 특성과 경험이 있는가?

- 영재학교 졸업 이후 학부 교육 입학 초기의 특성 및 경험과 그 이후 창의적 성취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이공계 분야 고성취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학부 입학 초기부터 창의적인 특질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창의적 환경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공계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창의적 성취를 보이는 영재학교 졸업생은 어떤 특성과 경험이 있는가?

- 창의적 성취를 보이는 영재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영재학교부터 대학 학부 교육 재학 단계에 이르는 종단적 관점에서 질적 면담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재학교부터 대학에 이르는 발달 과정에서 개인의 창의적 특질과 환경적 지원의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창의적 성취가 형성 및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학생 이동 및 특성에 관한 연구 - 초등학교 학령기 인구를 중심으로

저자 박근영, 남궁지영, 양희준(이상 한국교육개발원)

» 연구 목적

- 우리나라 시·군·구 지역의 학생 수 증감 양상 및 특성을 지역 간 학령기 인구이동 데이터를 중심으로 심층 분석
- 지역별 학생 인구이동 및 증감의 특성을 지역 행정·교육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전달하는 방안 탐색

» 주요 연구 내용 및 결과

「국내인구이동통계」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활용한 시·군·구별 이동 패턴과 규모 변화의 특성 분석

- 초등 학령기 인구이동 및 정주 인구 규모의 변화와 관련하여 특정 속성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표를 개발했으며, 이 중 7개 대표 지표를 활용하여 군집분석 실시
- 도시형 감소 지역, 농촌형 감소 지역, 중간 댐 역할의 중·소도시형 지역 등 유형별 군집 추출

지역 간 학령기 인구이동에 관한 사회연결망분석(SNA) 접근법 적용

- Pagerank(PR) 알고리즘을 적용, 지역별 초등학교 인구의 유입력 수준 계산
- Edge-Betweenness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학령인구 이동 권역을 도출한 결과, 행정구역상의 시도 경계와는 다른 고유의 상호 이동 권역이 있음을 확인

학령기 인구감소 대책의 현황과 한계, 그리고 인구이동 데이터의 활용 가능성 탐색을 위한 지역 전문가 인터뷰 실시

- 지역별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시행 중이지만, 지역에 특화되지 않았고, 내용과 방식이 거의 유사하며, 현상 완화 수준에 머무른 경우가 대부분임
- 각 기관의 기존 사업 운영 관행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협력 프레임워크가 필요
- ‘학령인구이동 정보 대시보드’와 같은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별 인구이동의 특성과 문제 양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을 확인

위기학생의 위기 경로 분석을 통한 지원 정책 개선방안 연구

저자 이승주, 박효원, 유예림, 이정우(이상 한국교육개발원)

»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위기의 요인(가정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 등)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학업적, 심리·정서적, 행동적 위기로 이어지는지 규명함과 동시에, 학생의 위기 경로 변화 양상과 그 영향요인을 탐색함으로써 근거기반의 위기학생 지원 정책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함.

» 주요 연구 내용 및 결과

위기학생 지원 정책 현황 및 한계

- 학업중단의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주요 지원 정책을 검토한 결과, 여러 개의 사업이 내용상 중복되어 있어 특정 학생들에게 중복 지원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학생 지원 체계가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을 만큼 분절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함.

위기학생의 위기 누적 효과와 위기 경로 유형화 분석

- 기존 공개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생의 학업적, 심리·정서적, 행동적 위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특히 개별적 위기보다는 복합적인 위기로 검토했을 때 훨씬 더 누적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위기 경로 유형화 분석을 통해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안정된 적응군'의 세 개 잠재 집단이 도출되었으며, 학생의 위기가 특정 집단에만 고착화된 것이 아니라, 시기별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특성이 있음을 밝힘. 특히 심리·정서적 위기의 경우, 안정적인 학업을 이어가는 데에 중요한 요소로 나타남.

위기학생 지원 정책 개선방안

- 기본방향 세 가지(조기 개입, 맞춤형 지원, 회복 지원)를 토대로, 7가지 세부 개선방안을 제시함. ①복합적 위기에 대한 조기 탐지 체계 마련, ②심리·정서 관련 검사 고도화, ③위기 집중기 신속 개입 체계 마련, ④학생 개별 특성 기반 진단과 위기 수준별 개입 프로세스 구축, ⑤부모·교사·지역사회 연계·협력의 다층적 지원 체계 강화, ⑥「학생맞춤형통합지원 체계」 정착 및 확산, ⑦장기적 회복 지원 및 연속성 강화, ⑧통합적 회복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제안함.

국가장학금 정책의 운영 성과 분석

저자 조옥경, 김지하, 백승주, 손윤희(이상 한국교육개발원)

» 연구 목적

- 2012년부터 국민들의 학비 부담 완화를 통해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도입된 국가장학금 정책의 운영 경과를 파악하고, 정책의 성과를 종합적·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국가장학금 정책의 성과와 의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주요 연구 내용 및 결과

국가장학금 정책 개관

- 2000년대 이후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정책의 도입 배경과 주요 경과, 국가장학금 정책의 변천 과정과 주요 특징을 분석하고, 주요 선행연구 및 신문기사를 통해 국가장학금 정책의 주요 쟁점을 추출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국가장학금 정책 운영의 실태 분석

-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정부의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의 등록금·장학금 운영, 학생의 학자금 대출 등 세 부문에서 추이·구조·분포를 시계열로 분석함. 정부 부문에서는 지원 규모와 체계의 변화를, 대학 부문에서는 장학 재원의 운용 특성을, 학생 부문에서는 대출 이용자 수·대출액·상품구조 등 차입 행태의 변화를 시계열로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함. 또한 배경특성별 격차를 함께 보여주어, 국가장학금이 등록금 부담·대출 의존도·대학의 장학 운용에 미친 영향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함.

국가장학금 정책 운영 성과 분석

- 국가장학금 정책의 목표가 학비 감면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교육적 효과를 수반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국가장학금 정책이 가져오는 경제적·사회적·교육적 성과를 다양한 방식과 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함.

국가장학금 정책에 대한 수요자 인식 및 요구 분석

- 국가장학금 수혜 경험이 있는 일반대 및 전문대 재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가장학금 정책의 성과(제도 만족도,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교육적 성과)에 대한 인식과 정책 방향에 대한 요구를 수렴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함.

국가장학금 정책의 개선 방안

- 국가장학금 정책의 전략적 방향을 탐색하여 제시함. 4대 원칙 - 형평·균형·공정에 기초한 배분 설계, 접근성·운영 효율을 높이는 집행, 투명성·책무성이 확보된 거버넌스, 예측 가능성을 갖춘 지속가능한 장기 운영
- 국가장학금 정책의 성과 분석 결과와 수요자 요구에 따른 정책 개선·발전 과제를 도출하여 제시함. 전략적 지향별 정책 과제 - 배분 설계 4개 과제(유형 구조 재설계, 소득연계 기준의 정교화, 학업 지속 보장형 유지 기준의 합리화와 이탈 예방, 지원 범위·항목 재설계), 집행 2개 과제(신청 절차 간소화·정보 접근성 강화, 대출·장학 통합 관리체계 구축), 거버넌스 3개 과제(데이터 공개·접근성 강화, II 유형 구조 개선, 정책 집행 거버넌스 구축), 장기 운영 1개 과제(제도의 지속가능성·중기 운영기준 고정)

고등교육 규제 혁신을 통한 대학의 재정 여건 개선 방안

저자 서영인, 김용남(이상 한국교육개발원)

» 연구 목적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재정지원 확대가 제한된 상황에서 고등교육 규제 혁신을 통해 간접적인 지원으로나마 대학의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은 재정 여건 개선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

» 주요 연구 내용 및 결과

고등교육재정 규제 혁신의 배경

- 고등교육재정 규제의 개념, 규제의 혁신, 규제의 이슈 등에 대해 분석함. 분석 결과 고등교육재정 규제는 5.31 교육개혁 이후 지금까지 정책 수단이기 보다는 통제로 기능하여 대학의 재정 여건 개선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으며, 등록금 인상 상한제 법제화 이후 본격적인 사회적 이슈로 등장함.

대학 재정 여건과 규제의 현황 및 문제

- 대학의 세입·세출, 등록금 및 국고보조금 현황, 운영비 지출에서 보수 등 경직성 경비·기부금·산학협력단 수입·교육 외 수입 등이 차지하는 비중,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수혜 현황, 교육여건 투자 등 재정 여건을 대표하는 다양한 항목들의 변화 추이 분석. 또한 고등교육재정 규제의 근거를 파악하고 이에 관한 이슈와 쟁점을 도출함.

고등교육재정 규제 혁신 효과 추정

- 대학 재정에 대한 규제 영향을 진단하기 위해 대학 재정의 다양한 수익적 요소들이 재무적 운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또한 등록금 인상 상한선 법제화 및 고등교육 정책을 통한 각종 재정 규제가 대학의 재정 여건에 미친 효과를 추정함.

해외사례

- 미국, 독일, 일본의 고등교육재정 구조의 특징, 고등교육재정 규제의 근거, 고등교육재정 규제의 관리·운영, 고등교육재정 관련 규제의 쟁점 및 이슈 등을 분석하여 본 연구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대학의 재정 여건 개선 방안 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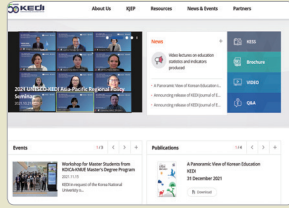
- 대학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주요 방안 및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함. 기본 방향으로 대학의 자율성 제고, 규제-지원 간 균형 확보, 획일적 규제 지양, 재정의 충분성과 지속성 유지, 대학의 수입 구조 다변화 등을 제안했으며 이에 따른 주요 추진 방안별 세부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음. ①등록금 규제 혁신과 관련해 단기, 중기, 장기적 접근 방안 및 대학 재정의 투명성 제고 의무화, ②장학금 규제 혁신과 관련해 국가장학금 II 유형과 등록금 연계 분리, 사립대학의 국가장학금 회계처리 규제 개선, ③국고보조금 규제 혁신과 관련해 규제-지원 간 균형 확보(Dual Focus System), 국고보조금 지원 및 예산 집행 규제 개선, ④ 산학협력 규제 혁신과 관련해 수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학교 기업 및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규제 완화, 교수 창업 및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제안함.

한국교육개발원(KEDI) 누리집

한국교육개발원은 국내·외 교육분야, 다양한 영역의 동향과 정보, 교육계 소식 등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육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EDI 홈페이지
www.kedi.re.kr



KEDI 영문 홈페이지
kedi.re.kr/eng



KEDI 전자도서관
kedi.re.kr/libr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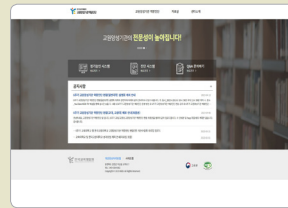
교육통계서비스
kess.kedi.re.kr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edpolicy.kedi.re.kr



늘봄·방과후중앙지원포털
www.afterschool.go.kr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센터
necte.ked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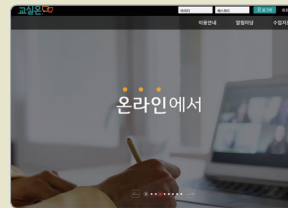
교원지우지원센터
forteacher.kedi.re.kr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www.edumac.kr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www.hub4u.or.kr



교실온달
edu.classon.kr



영어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
ged.kedi.re.kr



방송통신중학교
www.cyber.ms.kr



방송통신고등학교
www.cyber.hs.kr

한국교육개발원(KEDI) SNS

- 한국교육개발원 유튜브 youtube.com/@KEDI
- 한국교육개발원 인스타그램 instagram.com/iam_kedi_
- 한국교육개발원 페이스북 www.facebook.com/KEDIPR
- 교육정책네트워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pf.kakao.com/_RISxcj
- 교육정책네트워크 인스타그램 instagram.com/edpolicy_network/
- 교육통계서비스 블로그 blog.naver.com/kedi_cesi



ISSN 1228-291X

「교육개발」 웹진



2026년,

삶의 질을 높이고 균등한 발전을 이루는 교육,
나눔과 배려, 소통과 협력의 가치를 높이는 교육,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
한국교육개발원이 **‘더불어 사는 시대를 위한
대한민국 교육’**을 새롭게 디자인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과 교육제도를 만들어
정부와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학생이 행복하고 교사가 즐거움을 느끼며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미래사회를 지향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개발해
학생들이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고 낯선 문제에 적극적으로 맞서며
세계를 무대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도록 도와줍니다.

무엇을 아는가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지향하며
잠재력을 키워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을 성취하게 하며
존중과 배려, 책임감을 바탕으로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을 길러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미래사회 핵심역량 교육, 혁신적인 초·중등교육이 고등교육으로 이어져
대학이 인재를 육성하고 국가발전과 인류사회에 공헌할
세계적인 연구성과와 글로벌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